

2006 년 8월
박사학위 논문

韓 · 中 · 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商品交易에 미치는 效果 및
대응방안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金 英 筭

韓 · 中 · 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商品交易에 미치는 效果 및
대응방안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TA contrac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entered on Countermeasures for Goods Trade-*

2006년 8 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金 英 筭

韓 · 中 · 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商品交易에 미치는 效果 및
대응방안을 中心으로

지도교수 김 명 호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 년 4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金 英 筭

金英筭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2006 년 6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
|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 6 |
|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 9 |
| 제1절 추진배경 | 9 |
| 1.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 9 |
| 2. 중국경제의 성장과 개방화 | 12 |
| 제2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 13 |
| 1. 대외적인 측면 | 13 |
| 2. 대내적인 측면 | 17 |
| 제3절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선결문제 | 21 |
| 1.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 21 |
| 2. 한·중·일 FTA의 선결문제 | 23 |
| 제4절 한·일 FTA 추진현황 | 27 |
| 1. 한·일 FTA 추진동향 | 27 |
| 2. 한·일 FTA 진행과 내용분석 | 29 |

| | |
|--------------------------------------|----|
| 3.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 | 34 |
| 4.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 37 |
| 제5절 한·중 FTA 추진현황 | 40 |
| 1. 한·중 FTA체결의 의미 | 40 |
| 2. FTA체결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 42 |
| 3. 한·중 FTA체결의 필요성 | 44 |
| | |
| 제3장 한·중·일 제조업 교역현황 및 FTA의 효과분석 | 48 |
| | |
| 제1절 한·중·일 제조업의 교역추이 및 특징 | 48 |
| 1. 한·중·일의 세계교역 비중 | 48 |
| 2. 한·중·일의 역내교역 추이 및 특징 | 49 |
| 3. 한·중·일 3국간의 상대교역 분석 | 51 |
| 제2절 한·중·일 무역보완관계 분석 | 58 |
| 1. 역내교역비율 | 58 |
| 2. 수출결합도 | 59 |
| 3. 한·중·일 3국간 수출에서의 상호비중 | 60 |
| 4. 한·중·일 FTA체결의 기대효과 | 63 |
| 제3절 한·중 교역관계 현황 | 68 |
| 1. 수출입동향 | 68 |
| 2. 교역품목 현황 | 70 |
| 3. 한·중 기술경쟁력분석 | 72 |
| 4. 미·일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 74 |
| 5. 산업별 비교우위 | 75 |
| 제4절 한·일 교역관계 현황 | 79 |

| | |
|--|-----|
| 1. 일본의 교역분석 | 79 |
| 2. 한·일 교역분석 | 83 |
| | |
| 제4장 한·중·일 FTA에 따른 문제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 86 |
| | |
| 제1절 한·중·일 FTA의 문제점 | 86 |
| 1. 한·중·일 FTA의 문제점 | 86 |
| 2. 한·중 FTA의 문제점 | 88 |
| 3. 한·일 FTA의 문제점 | 89 |
|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 91 |
| 1.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 91 |
| 2.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 92 |
| 3. 통화·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95 |
| 4. FTA의 협력시스템 정비 | 96 |
| 5.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97 |
| | |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99 |
| | |
| 제1절 결론 | 99 |
| 제2절 정책적 제언 | 101 |
| | |
| 參考文獻 | 105 |

< 표 목차 >

| | |
|---|----|
| <표 2-1> WTO 발족 이전과 이후의 FTA 비교 | 11 |
| <표 2-2> 한국의 FTA 추진현황 | 14 |
| <표 2-3> 한국의 FTA 추진현황 | 19 |
| <표 2-4>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합의사항 | 22 |
| <표 2-5> 한·중·일 FTA 추진 논의현황 | 23 |
| <표 2-6> 한·일 FTA에 대한 논의현황 | 27 |
| <표 2-7> 관세율 수입현황 | 31 |
| <표 2-8> 한·일 양국의 산업간 관세율 비교 | 32 |
| <표 2-9> 한·일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입장 | 36 |
| <표 2-10> FTA 대상국가 평가기준 | 42 |
| <표 2-11> 중국의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반덤핑)추이 | 44 |
| <표 3-1> 한·중·일의 세계교역 비중추이 | 49 |
| <표 3-2> 한·중·일 교역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 49 |
| <표 3-3> 한·중·일 역내외교역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 50 |
| <표 3-4> 한·중·일 역내교역의 비중 추이 | 51 |
| <표 3-5> 한·중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 55 |
| <표 3-6> 한·일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 56 |
| <표 3-7> 중·일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 57 |
| <표 3-8>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 58 |
| <표 3-9> 한·중·일 3국의 수출결합도 추이 | 60 |
| <표 3-10> 한·중·일 3국간의 수출에서의 상호비중 | 61 |
| <표 3-11> 동북아 3국간 무역집중도 지수 추이 | 63 |
| <표 3-12>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도 한·중·일 무역효과 | 64 |

| | |
|--|----|
| <표 3-13> 한·중·일 FTA체결의 효과 | 65 |
| <표 3-14> 한국 전체 교역 동향 | 69 |
| <표 3-15>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동향 | 69 |
| <표 3-16> 중국의 대 한국 수출입동향 | 70 |
| <표 3-17>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품목 추이 | 71 |
| <표 3-18> 대 중국 10대 수출품목 추이 | 72 |
| <표 3-19> 한국기업 대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 73 |
| <표 3-20> 한국기업 대비 업종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 74 |
| <표 3-21> 한·중상품의 미국 및 일본시장 점유율 추이 | 77 |
| <표 3-22> 한·중·양국의 비교우위 및 열위부분(2003) | 78 |
| <표 3-23> 연도별 일본의 수출입 규모 | 80 |
| <표 3-24> 일본의 주요 수입 국가 | 81 |
| <표 3-25> 일본의 주요 수출 국가 | 82 |
| <표 3-26> 20대 대일 수입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 84 |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FTA contrac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entered on Countermeasures for Goods Trade-

Jin, Ying-Sun

Advisor : Prof. Kim, Myung-Ho,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se days multilateralism and localism coexist and prosper in the world economy, and localization through local trade agreement is deepening. After East Asia's economic crisis integration, the trend of the regional economies is getting obvious in the Northeast of Asia.

Although there is a discussion about FTA of Korea with China and Japan, the council of FTA between the countries is also important. Thus, I would like to progress the stud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s economy has developed due to trade.

Nowadays, under the complex circumstance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Free Trade Agreement (FTA) is emerging as a way of national strategies to break through the complex circumstances. As most nations in the region of East Asia, the birth of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lately performed the works related with FTA, and the conclusion of FTA in the region of the North-East Asia can be meaningful in constructing such economic communities as EU and NAFTA of FTA in the world. On the process of FTA development, economic and historical obstacles from various nations make FTA negotiations delayed.

In view of economic effects, Korea needs to restructure her manufacturing sector and agriculture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FTA. with a strategic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some parts of our manufacturing sector may be negatively affected on our FTA partners in the East Asian region.

However, we still face with some obstacles in achieving any ki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m of Free Trade Area because of widening intra-regional trade imbalance, deterioration of the overall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members, China's adherence to its socialist regime and also a lingering and bitter history in the region.

Therefore, to create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we need to implement strategy that will gradually lead to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l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We can take a long-term perspective in propelling economic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First of all, trade regimes in the respective countries should be harmonized through strengthened cooperation, which can serve as frameworks for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medium and short terms. Then, based on unified trade regimes,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hrough the gradual and asymmetric approaches can be

followed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market access. With these steps, we can temporarily mitigate the negative side effects which may be incurred and probably mitigate the negative side effects which may be incurred through simply expanding market access by securing time in advance for the enterprises in the region to acclimatize themselves to the trade environment.

Korea-China-Japan FTA should be future-oriented with the spirit of a new bilateral or trilateral partnership and action plans based on open regionalism, In assessing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Japan FTA, they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long-term positive dynamic effects rather than to the short-term negative static effects. However, in order to avoid the uncertainty of the long-term positive effects and to secure strong impetus for the pursuit of Korea-China-Japan FTA, both members have to seek the means by which to achieve clos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m.

So as to increase the long-term dynamic effects, they have closely to coordinate their domestic reform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and governance transparency, in particular, of China as well as their external policies for promoting the bilateral and/or trilateral cooperation in investment, industry and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For example, Korea, China and Japan need to standardize and modernize the different trade norms of each country, such as customs procedure, anti-dumping rules, rules of origin, the unification of product classification, etc, in order to lay down the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Even though the economic impact of an once-and-for-all trade liberalization at the same level among the countries was analyzed in this paper, it is far away from a reality. A step-by-step trade liberalization among them will be more

plausible: The liberalization scenario could consist of differential liberalization regimes based on a subsequent liberalization of Korea and Chin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FTA는 WTO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지역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세계경제의 흐름, 즉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 내지 통합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간 FTA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중 경제무역협력에는 새로운 발전공간이 요구되는데 무역자유화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우선 한·중간에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 산업, 정보기술 교류에서 장애요인이 많아 비용이 높고 시스템과 정책의 조화와 법규의 투명성 등이 결여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양국간의 무역·투자 증가는 언젠가는 제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와 수출시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무역마찰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려면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세율 격차에 비추어 FTA 체결시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철강 등의 대 한국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여 FTA 추진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으므로 FTA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은 각기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기본적으로 역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역내 FTA 추진에서 일본에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은 2000년을 전후하여 일본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전환하여 단순히 WTO의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던 데서 쌍방간의 FTA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며, 이후 일본이 불과 2~3년 사이에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시켰을 뿐만 아니라, ASEAN, 멕시코, 칠레, 한국 등과의 FTA 연구 및 협상, 심지어 민간기구를 통해 대만과의 FTA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WTO 중심의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진과 이와는 상반된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심화의 현 상황 하에서 한국이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권 형성과 향후 추진가능성이 높은 한·중·일 FTA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국제경제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 통상정책은 지역경제통합체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체간의 통합이라는 보다 다양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은 지역 및 자원적 조건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 하에서도 수출증대

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경제가 성장되어 왔으며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역과 해외투자 등 해외부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확산·심화되어 가고 또한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통합으로 재편되어 가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FTA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고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3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본 상태에 있으며 또한 한·일 FTA 및 한·미 FTA 등은 연구 중에 있고 이외에도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및 기타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중·일 경제통합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이슈로서 앞으로 경제협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또한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수준이 낮은 것은 과거사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무역불균형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은 소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21세기에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며 자원·기술·자본·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지역경제권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 통상정책은 지역경제통합체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체간의 통합이라는 보다 다양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환경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 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의 특정 국가간 특혜적 무역조치의 상호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보편화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해외여건변화에 쉽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여건변화를 신속히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에는 이론 전개를 위한 수리적 분석방법과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중심적 연구방법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얻고 이를 해석하는 연구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존의 문헌 특히 한국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경제정책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나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 논문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FTA의 추진 배경,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의 중국과 일본과의 제조업 교역현황, 3국의 교역현황 비교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FTA형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WTO와 GATT 그리고 FTA에 관련한 규칙 및 협정들을 참조하여 FTA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자 했고 FTA에 대한 국내의 논문들, 관련내용을 웹 사이트상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선행연구는 기존의 연구 중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연구의 목적인 3국경제의 단계적 통합 접근 방식, 산업대·산업간 협력방안, 사회적 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인교 외(2001), Sohn and Yoon(2001), Japan's Cabinet Office(2001), Cheong(2002), 박인원(2003) 등 여러 논문에서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인교 외(2001)¹⁾에 의하면 한·중·일 3국이 관세를 철폐 할 경우 한국, 일본 및 중국은 역내 국가에 대해 각각 227억 달러, 606억달러, 240억달러의 신규수출을 발생시켜 총 1,073억 달러의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경제통합이 달성되면 역내국간 수출액이 현재 수준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Sohn and Yoon(2001)²⁾은 동북아의 미 실현된 무역(missing trade)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예측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무역은 추측량의 86%, 대일무역은 67% 밖에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내각부(Japan's Cabinet Office 2001)³⁾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3국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율은 한국 3.2%, 중국 1.3%, 그리고 일본 0.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heong(2002)⁴⁾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북아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고 2.45%의 GDP 증가를 기

1) 정인교,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2) Sohn Chan-Hyun and Jinna Yoon,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KIEP, 2001. Discussion paper pp.1-10.

3) Japan's Cabinet Office, "Towar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apan's Cabinet Office, 2001.

4) Cheong Inkyo, "East Asian Economic Effects Inter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2002, Policy Analysis, pp.2-20.

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원(2003)⁵⁾은 동북아의 3국 모두 3국간 FTA 체결로 이익을 보겠지만 역내 무역 비중이 높으면서 역내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이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동북아 내 양자간 FTA보다는 3국간 FTA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임을 예시하고 있다.

중국의 Hu(2001)⁶⁾는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홍콩·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FTA가 중국경제의 세계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시장개방에서 FTA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FTA 공동연구로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및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에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의장국으로 3국간 학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FTA 검토를 제안⁷⁾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2004년 9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협동연구” 세미나 개최에서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3국간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후생효과는 한국이 178억 달러로 일본의 616억 달러, 중국의 478억 달러보다 적다”고 밝혔다. 또 국내 총생산(GDP)증가율 면에서도 한국은 1.74%로 중국 5.91% 보다는 낮고 일본 0.61% 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조업 경쟁력은 일·한·중 순서인데 비해 관세율은 중·한·일 수준이어서 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일본이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⁸⁾ 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박사는

5) 박인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행, 2003.

6) Hu Angang, "Proposition for Setting Up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Hong Kong, Japan and Korea", 2001.

7) 언론에서는 “한·중·일 3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중국 주룽지 총리가 제안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중국측이 한·중·일 3국간 FTA 연구를 제안하였고 따라서 중국이 한·중·일 3국간 FTA에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까지 있다. 그러나 사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공동연구주제는 3국 연구진간 합의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농산물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4억 12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교수는 “EU나 NAFTA 등의 선례로 볼 때 FTA는 경제적 효과분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라며 “세계 제조업의 산실역할을 하는 한·중·일이 경제력에 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려면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⁹⁾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연구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3국간의 산업협력방안을 제시해보고 이를 위해 단계적 점진적 추진, 산업간 및 산업내 협력방안과 사회문화적 WIN-WIN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8) 신현수·이원복, 『동아시아국가의 파트너』, 산업연구원, 2003, p.27.

9) 조선경제, 『한·중·일 FTA 체결때 경제적 이익』, 2004.9.14, 7면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제1절 추진배경

1.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21세기를 맞이한 최근의 세계경제는 급격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으나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진행이 지속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첫째, UR 다자간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하여 자유화와 개방화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태동되었다. UR 협상의 타결로 그 동안 다자간 무역회의 범위 밖에 있었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전체 비교역 분야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 흡수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개방시대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시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세계교역 증가와 전 세계 소득증가 등에 따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Boundless Competition) 또는 대경쟁(Mega Competition)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세계화라는 추세가 상징하듯이 자유주의 및 개방주의 조류를 반영하는 세계경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이나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범세계화와 맥을 같이하는데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등

기존에 발족된 지역통합체들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통합체들이 등장하고 있다.¹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WTO 체제하에서도 유럽, 북미 등 주요경제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주도권 쟁취와 자국 이익확대를 위한 기술적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¹¹⁾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블록화 현상은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변형된 보호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지역주의는 특히 한국과 같이 역외 국가이면서 수출지향적인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경제의 운용과 진로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한 맹목적 대결이 과거의 유물이 되면서 세계경제는 각자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왔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오랜 체제경쟁이 끝나면서 자본주의 방식의 국가경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사력 경쟁방식에서 경제력에 근거한 이해관계 균형이 중시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경제력이 국가간 세력판도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APEC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즉, 이 지역 국가들에 의한 생산량은 매년 확대되어 세계의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후발공업국들이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에 힘입어 이들 국가들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심화요인은 개발국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WTO와 같은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작은 개발국가가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10) 이경희, 『지역무역협정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3년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p.36.

11) 신보호주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설정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수량중심의 쿼터(Quota), 집단적인 무역관리방식인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등을 들 수 있다.

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하여 개도국의 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했었던 시기였다.

<표 2-1> WTO 발족 이전과 이후의 FTA 비교

| | WTO이전 | WTO이후(새로운 FTA) |
|-----------|---|--|
| FTA목적 | 정태적 목적 관세인하 무역확대 | 동태적 목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제개혁 |
| FTA대상 | 상품 및 서비스 |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경제협력 |
| 무역에 대한 시각 | 무역의 후생효과 강조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 부정적 효과: 무역전환 | 무역창출효과 강조 자유화로 인한 무역창출 |
| 무역체제 | 블록화에 대한 우려 블록간 보호주의와 통상마찰 우려 | 자유화 촉진효과 인정 체결국간 자유화가 세계적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봄 |
| 체결대상 |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 지리적 인접국가 | 자유화 의사 공유국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제371호, 2002.10.23. p.10.

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한 것은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외에 이해관계가 크면서 뜻이 통하는(likely-minded) 국가끼리의 무역자유화에도 협정체결국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개별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985년 체결된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중동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유

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북미지역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MERCOSUR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즉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다양한 기대와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볼 때 이를 어느 하나의 이유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협정책” 차원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체제의 규범이 느슨한 것도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WTO로 통칭되는 다자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차별원칙(Most Favored Nation: MFN)이지만 지역무역협정은 특정 조건아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¹³⁾

이런 점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ANIEs)과 아세안 국가 등을 BEM(Big Emerging Market)이라 불리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의 경제적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21세기에는 세계최대의 생산 및 소비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역내 일부 국가들을 강타하여 경제성장률이 일시 하향 조정되었지만 성장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성장가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 중국경제의 성장과 개방화

중국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존속과 높은 교역장벽 그리고 WTO 비회원국이라는 특수한 입지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해 왔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였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¹⁴⁾ 기간 중 중국의 강택민 주석은 ASEAN 국가와의 FTA를

12) Krueger, A. O., 「Ar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Trade-Liberalizing or Protection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9, pp.105-124.

13) 정인교,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pp.12-14.

14) ASEAN+3국회의 예서는 동아시아를 묶어 북미 EU에 대응을 강조했다(2000.11.25 중앙일보)

제의한 바 이의 배경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 지역무역협정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2월 발표된 한·중·일 FTA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정부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한편 세계무역의 발전추세로 볼 때 현재 지역간 자유무역지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유럽자유무역지대는 머지않아 중유럽과 동유럽 등 경제전환형 국가로 확대될 것이며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로 확대될 것이다.

비록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며(일본제외) 또 무역액증가가 가장 빠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장 완만하고 시장장벽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 내 경제성장 잠재력과 무역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FTA설립은 동 지역 내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대외적인 측면

WTO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상이 FTA 체결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교역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보면 싱가포르는 60.1%, 미국은 35.3%, 중국은 19.6%, 일본도 2.4%인 반면 한국은 0.5%에 불과

15) 胡鞍鋼, 『중국·홍콩·일본·한국간 자유무역지대(FTA) 설립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01, pp.1-3.

하다. 특히 최근의 FTA 추세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만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정부조달, MRA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경험하는 상대적 불이익은 훨씬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세계적인 FTA의 확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 2004년 4월 발효된 칠레와의 첫 FTA를 출발점으로 현재 많은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이다.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인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또 한·EFTA는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총 4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5년 7월 12일,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다. 2005년 하반기에 정식 서명과 2006년 상반기 중 개별국가별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2006년 하반기 중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부터 협상이 공식화 되었다.¹⁶⁾

일본과의 FTA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이다. 그동안 모두 여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품양허수준,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004년 12월 제6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해 일본측이 한국이 기대하는 만큼 개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 내에서도 한·일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다가 최근 악화된 양국관계 등으로 협상을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표 2-2> 한국의 FTA 추진현황

| | 기체결 | 협상중 | 산·관·학연구 | 검토 |
|----|------------------|------------------|----------|----------|
| 국가 | 칠레 ('04.4.1 발효) | 일본('03.12, 개시) | 멕시코 | 미국 중국 |
| | 싱가포르 ('04.11 타결) | ASEAN('04.2, 개시) | 인도 | |
| | EFTA*('05.7 타결) | 캐나다('05.7, 개시) | Mercosur | |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료: 정재화, 세계 FTA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학회, 2005. 09, p.37.

16) 헤럴드 뉴스, 『한-미 양국 FTA협상 공식선언』, 2006, 02.03.

한·ASEAN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상품분야를 타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반면 아세안 측은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느긋한 입장이어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상품양허 방식, 원산지 규정,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문제 등에 있어 양국간 의견차이가 있는데다가 아세안 측이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1월부터 양국 정부간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차례에 걸친 예비협의를 마무리하였다. 2005년 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열렸고 향후 1년 정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멕시코 FTA는 공동연구를 마무리하였다. FTA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멕시코를 공동연구까지 끌어 냈으나 멕시코 측 산업계의 반발로 협상개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인도와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인데 인도는 한국과의 FTA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06년 중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7년 중 협상 개시 전망이다. 또 MERCOSUR와도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한편 미국과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양국 정부간 FTA 추진을 위한 비공식 사전 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미측의 FTA 정책 및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FTA 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등에 대한 실무차원의 파악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 미국은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개방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2005년부터 향후 2년간 예정으로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KIEP와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C)이 연구를 수행한다. 당분간 협상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한·중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5년 10월 14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경단련과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2년 서울, 2003년 북경, 2004년 동경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3

국의 경제인들은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한·중·일 투자협정의 2006년 내 정식교섭 개시와 조기체결, 한·중·일 투자협정의 2006년 조기교섭 개시를 전제로 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산·관·학 공동연구의 2006년 중 추진을 각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한편, 한·중·일 유력 경제인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일 FTA 전망과 과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일 협력, 한·중·일 에너지 협력과 Business 원활화 방안, 한·중·일 산업간 협력 강화방안 등 4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⁷⁾

21세기 세계경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정보화 시대(information society)로 특징지을 수 있는 만큼 기업활동의 국제화 추세의 효과적인 활용과 수출산업으로서 기업내부의 효율성 증가수단으로서 정보화 추세의 활용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경쟁력 있는 산업의 본거지(home base)로서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Rosecrance(1986)는 21세기는 국가이익의 실현에 있어 군사력과 영토, 인구수보다 통상을 통한 경제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한국민이 높은 소득을 향유하고 이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주요활동의 근거지가 될 필요가 있으며 상하류 산업(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y) 및 관련 산업, 기술인력, 수요의 특성, 시장경쟁 상황 등에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¹⁸⁾ FTA는 경쟁의 강화, 시장규

17)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18) Porter, Michael E.(1990)참조.

모의 확대와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하여 일국 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국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21세기 경쟁력 있는 통상국가의 건설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WTO를 통한 다자체제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이하 MFN)원칙에 입각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혜택을 회원국 전반에 제공하고 규칙에 근거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FTA는 참여국 간에만 그 혜택이 배분된다는 점에서 특혜적인 측면이 있다.¹⁹⁾ 따라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 체결에 한국이 동참하는데 실패한다면 경쟁국에 비하여 그만큼 손실이 클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99년부터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멕시코, 태국, 일본 및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하여 연구 혹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그간의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농민과 농업관련단체들은 물론 소비자 단체들까지 가세하여 농업부문의 개방에 반대해 온 바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를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일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2. 대내적인 측면

정부는 2005년 12월 1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은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하여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한·싱 FTA 발효²⁰⁾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19) FTA는 GATT Article I의 원칙에 따라 예외로서 GATT Article XXIV에 의해 인정.

20) 국내이행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시행.

이 법은 대다수의 FTA에 포함되는 계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 절차, 계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동 법 제정과 함께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동시에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의 구성체계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규정하고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누어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체결되는 FTA는 별도의 입법 제·개정 없이 대부분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개정만 거치면 되므로 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법은 한·칠 FTA를 제외한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수입업자·수출업자 및 생산자뿐만 아니라 계약상대국의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칠 FTA 관세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일반법 제정에 불구하고 관세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한·칠 FTA 관세특례법은 계속 존치되기 때문이다.

<표 2-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 대상국가 | 진행상황 | 향후계획 |
|------|----------------------|---------------------------|------------------------------------|
| 협정발효 | 칠레 | 2004.4.1 발효 | - |
| 협상타결 | 싱가포르 | 2005.8.4 서명 | 2005.12.1 국회비준 |
| | EFTA1) | 205.7.12 타결 | 가서명(9.3)→본서명(12월중)→ 2006 하반기 발효 |
| | 아세안 | 205.11.29 상품분야 주요내용 타결 | 2006 하반기 발효 추진 |
| 협상진행 | 일본 | 6차협상 완료 | 6차(2004.11)이후 교착상태 |
| | 캐나다 | 3차협상 완료 | 2006상반기 협상타결 추진 |
| 공동연구 | 미국 | 3차연구 완료 (공동연구 종료) | 빠른 시일내 협상 개시 |
| | 멕시코 | 6차연구 완료 (공동연구 종결) | 2006. 1~2월경 협상 개시 |
|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2차연구 완료 | 2006년말 또는 2007년초 3차연구 예정 |
| | 인도 | 3차연구 완료 | 2006년 12월 4차연구 예정 |
| 민간연구 | 중국 | 2005공동연구 개시 | 향후 2년간 공동연구 |
| | 한·중·일 3국간 FTA | 2003공동연구 개시 (중국측 제외) | 2005 연구 완료 |

1)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유무역협정연합체

2) 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경제공동체

자료: 김석오,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 및 향후과제』, 「관세와 무역」, 2006년 1월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01, p.35.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²¹⁾ 하지만 협정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에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FTA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FTA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가는 기존의 관세제도와 상이한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내법령 체계를 맞추지 아니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오류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21)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려하여 FTA 시행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협정과 국내법령 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서는 국내법령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입법상식과 관련,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칠 FTA 관세특례법²²⁾과 같이 개별 FTA마다 이행특례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이에 따른 입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은 한·칠 FTA(2004.4.1 발효)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한·싱 FTA와 한·EFTA FTA가 체결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 한·아세안 FTA 및 한·캐나다 FTA가 체결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멕시코·인도·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곧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며(<표 3-5> 참조), 앞으로 최대 50여 개국과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협정발효를 지연시키며 국내법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경제의 달성과 신속·간편한 협정발효를 위하여 기본법 방식의 입법추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방식의 일반적 관세특례법의 제정은 매 FTA 체결시마다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이행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다. 이외에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대국민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도 FTA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FTA 이행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rewriting)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⁴⁾ 또한, 일본의 경우 관세법 보다 우선적으로

22)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4.3.5 법률 제172호)

23) 외교부 2005년 업무계획

24) 미국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을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1993)을 제정, 특별법적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의 관세잠정조치법에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한국과 FTA를 체결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협정과 상충되거나 협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입법방식에 따라 FTA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선결문제

1.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한·중·일 FTA는 90년대 말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중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한 90년대 말부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FTA 공동연구회(9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지켄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고 학회를 중심으로 한·중·일 FTA를 제안하는 등 3국간 FTA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유보했었다.²⁶⁾ 그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고 한·중·일 3국 정상은 마닐라회담에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근거를 마련한 후 상충되는 내용은 국내 관세법령(CFR 등)에 재규정

25)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8 참조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ep.go.kr>)

<표 2-4>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합의 사항

| 분야 | 주요내용 |
|----------|--|
| 회담 정례화 |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로 매년 정례화 |
| 경제연구공동연구 | 2001년 공식 착수, 연구기관(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 일본종합연구개발기구) |
| IT협력 | 국장급 전문가 그룹설치 |

자료: 이재기, 『국제경제의 이해』, 두남, 2000, 참조.

2000년에는 한·중·일 연구기관,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동안 중국의 WTO가입, 무역과 투자분야의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었다.

2002년에 朱鎔基총리는 아세안+3 회의 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의 타당성 조사를 처음으로 제의하였으며 당시 한국 측은 찬성을 표시한 반면, 일본 측은 한국과 FTA 조기체결을 희망하며 3국간 FTA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한·중·일 FTA 공동연구회의에서는 “한·중·일 FTA의 개략적인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3국 기업의 FTA에 대한 견해 조사”를 2003년 공동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8월말까지 연구를 종료한 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5> 한·중·일 FTA 추진 논의 현황

| 시점 | 한·중·일 FTA 추진 논의 현황 |
|-------------|--|
| 1999.1 1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2000 | -한·중·일 연구기관,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논의 개시. |
| 2002.1 1 | -朱鎔基총리, 아세안+3 회의 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타당성조사 제의. |
| 2003.2 |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한중일 FTA공동연구회의(2월 14일~16일)에서는 "한·중·일 FTA의 개략적인 효과 및 타당성 검토, 3국 기업의 FTA에 대한 견해 조사"를 2003년 공동연구 주제로 설정, 8월말까지 연구를 종료한 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서로 제출기로 함. |

자료: 심윤섭, 『중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3.4. 제작성

2. 한·중·일 FTA의 선결문제

1) 사회적·정치적 상호이해 관계개선

국제협력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 국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에는 많은 부문에서의 상호교류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한·중·일 지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정치적 대립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등으로 상호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상호이해 및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경제통합이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한·중·일 3국간 얽힌 과거사 청산문제 및 영토분쟁, 교과서왜곡문제 등 일본 내 극우세력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중·일 및 한·일간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한국이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앞으로 한·중·일 경제권이 형성되어 국경을 초월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회·관습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교류확대도 3국간 경제협력의 여건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교류, 전통문화의 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노력부터 시작하여 학술세미나의 교환개최, 유학생의 교류 등을 통해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지역경제 협력체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할 때 한·중·일 경제협력 형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일본기업가들이 한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작지 않기 때문에 관세 등의 대일 시장개방화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관세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으나 중국과 한국의 관심 품목 중에는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품목도 있으며, 또한 비관세 장벽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수준을 WTO 가입을 계기로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경제에 있어서 한국경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한국이 먼저 일본과의 수평적, 수직적 산업협력의 확대를 적극 추진, 양국 간 교역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 전략의 중심 지역이며 경합 관계보다 보완관계가 강해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이 FTA정책에 단기간 내에 추진할 가증성은 낮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은 현재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 하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전에 먼저 국내경제 및 산업환경의 점검을 통해 FTA 협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경제 및 산업기반이 취약할 때, FTA의 추진은 오히려 국내경제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먼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의 완화,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성공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이 갖추어진 후에 FTA의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⁷⁾

3) 통화·금융의 협력 강화

한·중·일 경제협력 관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현안인 금융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관계의 긴밀화는 더욱 중요하다. 원/엔의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일간의 무역·투자의 확대는 지속되지 않는다.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아시아국이 하나같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 달러에만 고정하는 외환정책을 추진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⁸⁾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 달러 외에 EURO와 엔을 포함한 통화바스켓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원화 환율이 미 달러와 엔화 환율의 변동에도 조정되어짐에 따라 원/엔 환율을 안정시키게 된다. 일본은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같은 유동성 지원조치와 병행하여 안정된 통화체제 구축과 엔화의 신속한 국제화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중국도 외환위기에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 아시아 통화위기 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일 상품·서비스시장의 통합화에 맞추어 금융·자본시장의 통합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중·일 상호연대에 의한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세계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술한 금융서비

27) 나형근, 『자유무역협정(FTA)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경련 국제본부 미주협력팀, 2000.11.21, p.5.

28)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21세기 日·韓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총론)』, 21세기 日·韓 경제관계연구회 보고서, 2000, p.30.

스 자유화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자국의 금융·자본시스템을 공통적으로 되도록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한·중·일 각 국의 협력관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 국의 현안인 금융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對아시아 자금 공급 능력을 제고시킨다면 동북아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역연구 활성화

한·중·일간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경제 및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3국간 정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 협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중·일 자유무역은 아직 3국간 합의된 운영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또는 ASEM으로부터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의 운용체계는 일차적으로 APEC의 운용체계에서와 같이 ①정상회의, ②분야별 각료회의, ③다자간 무역체제와 조화, ④역내차원의 무역 투자 활성화, ⑤분야별·협력사업의 추진, ⑥민간부분의 활동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⁹⁾

29) 신용대 외 5명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3」, 2000.3.29, p.117.

제4절 한·일 FTA 추진현황³⁰⁾

1. 한·일 FTA 추진동향

<표 2-6> 한·일 FTA에 대한 논의현황

| 일자 | 내 용 |
|------------|--|
| 1998.10 | 김대통령 방일 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제안에 따라 긴밀한 경제관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 제의.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 |
| 1999.3 | 오부처총리 방한 중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틀을 넘는 양국관계강화를 표명. 이에 따라 BIT, MRA도 추진중. IDE와 KIEP 공동연구 발족. |
| 2000.5.22 | IDE-KIEP 1차 공동연구결과 발표. |
| 2000.9.16 | 8차 민간교류단체인 한·일포럼에서 일본측은 강력하게 한·일 FTA 희망의사를 표명. |
| 2000.9.24 | 김대통령 방일 중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 IT분야 협력확대 합의. BIT 연내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약 가속화에 합의. 양국 IT분야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일 IT협력 공동이니셔티브’ 채택. |
| 2000.9.28 | IDE-KIEP 2차 심포지움 개최(도쿄) |
| 2000.10.26 | 전경련과 經團連이 17차 한·일세계회의(도쿄)에서 한·일 FTA 추진 검토를 위한 전문가기구 설립에 합의. 전경련은 FTA 추진에 앞서 양국간 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확대를 요청. IT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상호인적교환, S/W 공동개발, 양국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 |
| 2001.5 | 양측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 |
| 2001.9 | 1차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서울)하고 IT협력위원회 설치 및 2차 포럼 개최(도쿄)에 합의. |
| 2001.12 | 한·일 BIT 제9차 본 협상이 개최(도쿄)되어 양국 BIT 체결에 기본 합의 도출. |
| 2002.1.25 |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제2차 공동회의에서 양국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

자료: 김양희,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세계경제」 2002년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04, p.109-113. 제작성.

30) 정재화, “한·일 FTA 추진현황과 주요이슈”, 「관세와 무역」 2004년 9월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4.09., p.16.

한·일 FTA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화해와 우호정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하여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어서 1999년 3월 “한·일 경제협력 Agenda21”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 양국학계(KIEP와 IDE) 주도로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그룹”을 설립, 한·일 FTA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총리가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치에 합의하고 양국 기업인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일 FTA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3년 4월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연구회는 2002년 7월부터 2-3개월 주기로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투자확대, 협력사업 등 양국간 FTA의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고 지난 2003년 10월 제8차 회의까지 공동연구회 활동을 하였다. 공동연구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한·일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약속하고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관세철폐 뿐만아니라 비관세 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를 추진하며 FTA협상 개시 이후에는 하부협상그룹(sub-group)에서 비관세 조치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업계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등 업계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에 대비하며 업계간 기존 대화 채널을 보다 강화하고 양국의 학계는 FTA 논의에 대한 학술적 지원 및 양국 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 제시와 양국간 FTA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

국간 FTA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국의 이러한 공동 연구회는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추진의 타당성, 양국간 FTA의 기본원칙, FTA협상에 포함될 의제를 검토하여 왔고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연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2월에는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가졌는데 이 협상은 지난 10월 20일 방콕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를 2005년 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금년 중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그룹의 구조, 향후 협상일정 등 협상의 절차와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방향 등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한·일 FTA 진행과 내용분석

2003년 12월 첫 협상이 개최된 이래 6월까지 모두 네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WTO 협정에 일치하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일 FTA 추진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치분과, 투자/서비스분과, 기타 무역이슈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 등 6개 협상분과를 설치하였다. 협상일정과 관련해서는 평균 2개월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2차 협상은 2004년 2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상품양허안 교환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채 우선 제3차협상(4월, 서울)에서 협정문 초안을 논의하고 제4차협상(6월, 동경)시 시장접근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상품양허 분야에서의 불리함을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협력

분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이 구성을 주장한 MRA분과는 일단 구성하기로 하되 협상대상업종을 한정하지는 않고 협상종결 시 까지 MRA합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일본측의 단서를 수용하였다. 무역규제제도에 대해 양측은 FTA 추진의 보완장치로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제3차 협상은 200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NTM), MRA,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 협력 등 7개 분과별로 양측에서 사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양국은 의제별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정부조달, 검사검역, 인력 이동 등 많은 분야에서 이견을 표출하였다.

주로 협정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투자/서비스 자유화방식, 최혜국(MFN)대우, 시장접근 등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하였다. 비자면제협정과 관련, 한국 측은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체결과 기업인에 대한 비자발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일측은 별도의 채널에서 비자면제협정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4차 협상은 2004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추진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무역자유화 등 6개 협상분과별로 FTA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세를 보면 전산업 평균 수입관세율은 일본이 2.5%, 한국은 7.9%수준이어서 한국측이 보다 많은 개방부담이 있다. 산업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등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7.7%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8%, 일반기계 7.4%, 석유화학 7.8%, 섬유 7.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2-7참고).

<표 2-7> 관세율별 수입현황

| | 수입 | | 점유율(%) | | Tariff Line | |
|---------|--------------|--------------|--------|------|-------------|-------|
| | 한국 (백만달러) | 일본 (10억엔)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 무세 | 8,446 | 1,086.4 | 28.3 | 57.3 | 849 | 3,303 |
| 0<x<10% | 20,895 | 472.8 | 70.0 | 24.9 | 8,368 | 3,823 |
| 10%≤x | 508 | 57.1 | 1.7 | 3.0 | 1,944 | 1,109 |
| 기타 | 7 | 279.3 | - | 14.7 | 76 | 1,068 |
| 총계 | 29,856 | 1,895.6 | 100 | - | 11,237 | 9,303 |

자료: 정재화, 『한·일 FTA 추진현황과 주요이슈』, 「관세와 무역」 2004.9.

관세율별 수입현황을 보면 한국은 무세수입 비중이 28.3%, 일본은 57.3%로서 현재 한국의 대일 수출의 절반이상이 무세이다. 한국 관세는 10%이하에 전체의 70%가 물려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율이 8%내외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의 경우 한국이 1.7%인 반면 일본은 3.0%로 일본의 비중이 높다. 아울러 일본은 농수산물, 화학제품 등에서 비중가세가 많이 있다(<표 2-7>).

한편 한·일 FTA 협상에서는 비관세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비관세 조치란 국제무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관세 이외의 직접 또는 간접적 제한적 조치로서 수입품과 국내제품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측은 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유통장벽 등 일본내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와 같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반경쟁 관행의 해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사실관계, 관련규정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슈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논의의 대상을 정부조치에 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2-8> 한·일 양국의 산업간 관세율 비교

| 업종 | 한국의 수입관세율 | 일본의 수입관세율 |
|-------|-----------------------------|----------------------|
| 전산업평균 | 7.9% | 2.5% |
| 자동차 | 8% -일부상용차10% | 0% |
| 자동차부품 | 8% | 0% |
| 반도체 | 0% -원부자재 8%, -일부장비 3% | 0% |
| 철강 | 6% (04년부터 무관세화) | 1.2% (04년부터 무관세화) |
| 일반기계 | 7.4% | 0.37% |
| 석유화학 | 7.8% | 1.8% |
| 전자 | 8% | 0.8% |
| 섬유 | 7.2% | 7.7% |

자료: 정재화, 상계자료, p.17.

한국측은 비관세조치(NTM),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등 한국 측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발목을 적극 제기하였으며 일본 측은 지재권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상품 양허안 교환 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차기 협상에서 각 분야별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상품 양허안 교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품양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측 관세양허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공산품 양허안은 산업연구원의 초안을 토대로 업종별 회의를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산업자원부 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다시 농림부에서 마련한 농산품 양허안,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서비스 양허안 등과 합쳐져 우리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될 것이다. 양측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복잡한 것 보다는 간단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원산지규정 설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을 경유한 제3국 제품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희망하고 있다. 또 발급방식과 관련 일본은 기관발급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아직 입장정리

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술장벽과 관련해 당초 일본측은 MRA 분과 설치를 원치 않았으나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 분과설치에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증발급기관의 선정 등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아 타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농수산물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분야에서는 일본은 국제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2대 서비스수출국(23.4%), 2대 서비스수입국(16.4%)이며 한국은 일본의 6대 서비스수입국(4.9%), 3대 서비스 수출국(5.4%)이다. 양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한·일 FTA에서 서비스자유화는 negative list 방식에 의해 DDA협상의 양허내용 보다 광범위하게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공산품 분야에서의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할 때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FTA체결로 대한 투자가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측은 공동연구기간동안 투자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 한국측은 비자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잠정조치로 사업자들에 대한 비자면제와 복수비자 조치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측은 한국인의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자문제 개선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분야이며 한·일 FTA를 통해 일본은 지재권 보호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과 관련해 양국 모두 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나 현재 양국 정부조달 시장에 상호 적극 참가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일본측에 WTO의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특히 건설분야에서 일본의 폐쇄적인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산업협력은 한·일 FTA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기대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일본측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협력을 정부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측은 한·일 FTA를 계기로 양국간 구체적인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일본측이 얼마나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3.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

한·일 FTA에 접근해 가는 양국의 입장은 먼저 일본의 경우는 아직 지역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협력체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일본이 협력체 구성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역협력체 결성의 세계적 추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칠레와의 FTA체결이 유일할 정도로 FTA체결에 따른 반작용이 심한 편이지만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 관심을 두고 한·일 FTA를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일 평균실행관세율은 7.9%로 일본의 대한 평균실행관세율 2.9%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양국 산업별로 관세율은 15%이상이거나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이 되는 정점관세(tariff peaks)는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증가하고 대일 수출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기·전자, 일반기계, 운송기기부품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대일 수입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공동으로 양국간 FTA체결에 대비한 업종별 입장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한국측의 FTA에 대한 입장은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 크게 4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 한국측 경쟁력이 절대열위인 산업으로 FTA체결시 대일 수출은 어려우나 대일 수입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자본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이다. 둘째, 한국은 범용제품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FTA체결시 수출증대는 기대되나 고부가가치 제품은 단기적으로 대일 수입이 급증하여 타격이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섬유·의류, 석유화학, 철강, 가전, 자동차, 시멘트, 구리 등의 업종이다. 셋째, 대일 수입재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은 FTA체결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체탄력성이 낮은 대일 수입중간재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되는데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기계, 섬유, 석유화학, 플랜트(국내부문)등이다. 넷째, 업종의 특성상 FTA체결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업종으로서는 철강과 반도체의 경우 이미 양국간의 무역장벽이 거의 없고 반도체와 조선, 플랜트(해외부문), 항공의 경우 주력시장이 전세계이므로 FTA체결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9> 한·일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입장

| 유형 | 업종 | 배경 |
|------------------------------|-----------------------------------|---|
| 한국의 가격/비가격 경쟁력 절대열위 업종 | 기계, 종합상사 | FTA체결시 대일수출 곤란하나 대일수입 급증이 예상되어 국내산업 타격심각 |
| 한국의 가격경쟁력 우위업종 | 섬유·의류, 석유화학, 철강, 가전, 자동차, 시멘트, 구리 | FTA체결시 수출증대 기대되나 고부가가치제품은 단기적으로 대일 수입급증으로 타격심각 |
| 대일 수입재 사용 불가피한 업종 | 기계, 섬유, 석유, 화학 플랜트(국내부문) |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대일수입 중간재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 |
| 업종 특성상 FTA체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업종 | 철강, 반도체, 조선, 플랜트(해외부문), 항공 | 양국간 무역장벽이 거의 없거나 주력시장이 전세계 대상이므로 FTA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임 |
| | 시멘트, 식품 | 대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가치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어 FTA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임 |
| | 금융, 유통 |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거나 상대국 시장보다는 타시장에 관심이 많아 FTA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임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1.9월호 p.45.

그러나 업종별로 한·일 FTA체결이 양국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과 같은 과잉설비를 안고 있는 업종은 구조조정 등으로 세계경쟁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가전,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는 양국간 분업체제 구축 및 전략적 제휴 등으로 대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 및 의류는 양국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의 견제 및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³¹⁾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 한·일 양국의 관세구조와 대일 경쟁력에 의거해 볼 때, 한·일 FTA체결시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그로 인한 국내기술기반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비관세장벽의 철폐

31) 김양희, 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32-34,

여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및 지식기반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한 투자의 확대 가능성이 한·일 FTA체결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산업상 보완관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경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지 경제권을 구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4.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과 동향

한국의 경우 FTA의 체결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산업별)에서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①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②지역주의 환산에 적극 대응, ③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²⁾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이유로 FTA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FTA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하나의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 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되는 협정에서는 관세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수량제한금지, 세이프가드조치,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위생검역, 정부조달, 세관수속, 기준·인증,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 선진화된 통상규범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

32)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71~75참조.

기업들의 대일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들은 일본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폐쇄적인 유통관행이며, 이러한 것들은 한·일 FTA체결에도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시장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반경쟁적 상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협상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역역조 현상 및 경제의존도의 심화 등 한·일 FTA에 대한 마이너스(-)효과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배타적인 상관행 문제를 한·일 FTA협상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보다 조기에 한·일 FTA체결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반대로 한·일 FTA체결로 이러한 폐쇄적인 상관행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 일본의 입장과 동향

그동안 일본은 WTO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다자간 FTA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본의 경단련이 2001년 7월 일본정부에 대하여 FTA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런데 한·일간에는 이미 1998년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한·일 FTA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 논의를 시작해 왔다. 이것이 최근에는 더욱 강력하게 일본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일본-싱가포르 FTA³³⁾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런데 이 FTA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민감부문인 농산품 부문을 배제시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³⁴⁾ 따라서 일본-싱가포르 FTA는 향후 일본의 농산물 수출국과의 본격적인 FTA 체결에 대비한 모의시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³⁵⁾

33)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신시대경제연계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제반 경제정책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4) GATT/WTO 제24조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이 자유화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 싱가포르 수입품목의 90%이상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됨으로 WTO의 규정에 부합하며, 싱가포르는 전체 경제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포함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35) 金良姬·金鍾杰, 「日韓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2001,p.33

구체적으로 일본이 1998년 10월부터 민간차원에서 한·일 FTA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 시작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³⁶⁾ 우선 다자간 협상의 시간적 효율성 저하(예:APEC)를 근거로 일본은 양국간 FT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확대되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협정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의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 경험을 계기로 통화위기 피해국들의 관계강화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고, 그동안 너무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일본경제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경제는 최근 국민들의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추세 및 실업증가에 따른 소비축소문제,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개선에 대한 기대 감소, 일본 수출시장 성장의 불투명성, 일본기업의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수출증가를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출증가는 곧 일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FTA는 일본-싱가포르를 FTA를 토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관세인하, 세관절차 간소화, 분쟁해결, 상호인증, 투자관련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에 대하여 일본-싱가포르 FTA를 그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이 얼마나 과감히 그 장벽들을 철회시켜 나갈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한·일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국내학자들의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을 FTA의 대상국으로 선택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³⁷⁾ 그 이유는 우선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무역거래상의 여러 가지

36) Okuda, Satoru, "일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소고",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 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7, pp.105-109.

37) 일본의 FTA전략적 우선순위, 즉 어떤 국가와 어떤 시기에 FTA를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유리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공급구조가 세계적합성 차원에서 볼 때 그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득수준 증가도 일본의 FTA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그동안의 피라미드식 수직적 산업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과의 수평적 산업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외에도 WTO를 통한 다자간 룰의 보완 및 여타 경제권에서의 시장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등이 일본입장에서의 한·일 FTA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5절 한·중 FTA 추진현황

1. 한·중 FTA 체결의 의미

일반적으로 FTA 대상국가 선정기준은 경제적 이익 및 비용, 정치·외교적 동기, 협상 전략적 동기 및 기타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2-10참고).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및 지리적 인접성, 산업구조의 보완과 경쟁관계, 기술이전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데,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구조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한 무역규범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소위 spaghetti bowl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상대국의 경제적 기준, ②지리적 기준으로 아시아 역내의 관계강화, ③정치·외교적 기준으로 정치적 안정성, 통치능력, 민주화정도, ④현실적 가능성, ⑤시간적 기준 등을 들고 있다.

FTA체결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어떠한가?³⁸⁾ 우선 경제적인 측면으로 시장규모의 면에서 보면,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와 한반도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영토라는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03년도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이다. 한편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보면, 일본경제의 1.8배의 규모이다.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 면에서 중국은 경제적 잠재력이 크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4개국의 선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국영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해외 시장 접근 기회의 확대 면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EU 등과 함께 주요한 FTA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8)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파급효과와 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1, pp.49~53.

<표2-10> FTA대상국가 평가 기준

| | |
|-----------|--|
| 경제적 이익 | -시장규모 -무역장애요인(거리, 통상마찰, 관세 및 비관세장벽) -기술이전(상대국의 기술수준, 기술흡수능력) -경쟁력제고 -거대시장접근의 교두보 -FDI의 증가 |
| 경제적비용 | -구조조정비용(민간산업, 노동이동) -기회비용 |
| 정치·외교적 동기 | -지역안보 및 외교적 필요성 -자원(석유 등)의 안정적 확보 |
| 협상 전략적 기준 | -leverage 활용 가능성 |
| 기타 | -국내제도 개선 -대상국의 관심 |

자료: 박순찬(2004), 『한, 미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KIEP, P46
에서 재작성

2. FTA체결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또한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에 따른 수출혜택을 들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국시장의존도와 한·중 간의 잦은 통상마찰의 발생 정도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교해서 거래비용의 축소 면에서 한국에 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최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조현준 2004).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

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중국과의 FTA가 중요하게 된다. 중국의 적극적인 FTA추진과 대중화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중국을 교두보로 한 타 지역 진출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선진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력 제고와 기술이전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경쟁적인 부문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FTA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중 FTA 체결시 비교열위산업의 생산이 FTA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해당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인력이 실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구조조정비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일 3국의 FTA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에서 레버리지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FTA 대상국 평가기준에 비추어보면 중국은 FTA 대상국 선정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국가라는 점을 시사한다.

3.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한·중 양국간에는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집중하는 등 통상마찰이 증가해왔다(강문성 외 2003). 중국은 1997년 반덤핑법 제정 후 총 30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한국은 현재 19건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받고 있어서 중국 최대의 반덤핑 규제대상국이다.³⁹⁾ 연도별로는 2000년 3건, 2001년 5건, 2002년 9건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다가 2003년 3건, 2004년 5월까지 2건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호전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규제의 실익이 줄어든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품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2005년부터는 다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 2-11> 중국의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반덤핑)추이

(단위:건)

| 연 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 0 0 4 (1~5) |
|-------|------|------|------|------|------|------|------|------------------|
| 규제 건수 | 1 | 0 | 2 | 3 | 5 | 9 | 3 | 2 |

주: 조사개시 기준 (2002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6.2, p.25.

중국의 대한국 조사 및 규제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3건, 철강 2건, 기타 2건 순으로 석유화학품목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

39) 국별 순위를 보면 19건인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15건), 미국(13건)순으로 반덤핑 조사규제를 받고 있다.

학제품은 한국 수출의 1/3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중국의 규제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대부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또는 관세 쿼터 적용으로 나타났고 중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은 품목들의 경우 규제 이후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해 이 품목들의 대중 수출점유율은 1998년 11.0%에서 2000년 7.1%로 그리고 2003년에는 3.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간 잦은 통상마찰의 발생 정도나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교해서 거래비용의 축소 면에서 한국에 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2002년 11월 6일 FTA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 한국은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50억 달러 수준의 대중 교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측이 시행중인 중국측 관심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철폐 내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상품 일회용 라이터, 백시멘트, 소다회, 알카리성 망간 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도 다수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거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양국간의 통상 마찰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한국의 흑자구조에 대한 중국측의 견제로 해석된다. 또한 양국간의 민감한 협상분야로 농업부분의 갈등구조도 돌출되고 있다. 중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⁰⁾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포함시키는 하나의 경제협력체제가 출현하게 되는 경우 미국의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40)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2003.5.25, p.16.

한 일본은 여전히 경제주도권에 매혹되어 중국의 발전을 제어하려 하고 있으며, 자국의 민감부문에 과도하게 얽매임으로써 농산품 자유무역을 개방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문제에 관한 태도도 주변국들의 저항감을 계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ASEAN과의 FTA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경제일체화가 실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의 체결을 추진한 후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한·일 FTA의 체결을 추진한 후 한·중 FTA를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두 개의 FTA를 통합함으로써 동북아 FTA 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는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간에는 양국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의 의지가 있으며, 한·중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지리적·문화적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도권 쟁탈문제가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⁴¹⁾

이러한 현상을 반영이나 하듯 중국은 2005년 5월 기준 34개 경제체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요국 협상 파트너들은 ASEAN 10개국 이외에 칠레, 뉴질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이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주요한 목표를 살펴보면 지역구도 속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인 인접성,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 공급가능성, 중국의 수출시장 확대 및 해외투자 진출 대상지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이 ASEAN과 상품무역에 관한 FTA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한 것은 ASEAN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파트너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다방위, 다형식의 지역일체와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ASEAN+1 구

41) 김선광, 홍성규, 『한·중·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 「국제상학」 17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08, p.205.

도는 서남방향으로의 지역일체와 전략의 일환이다.⁴²⁾

그러므로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발전격차나 역사적 갈등 요인 등으로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 일본과 FTA 추진시 그 우선순위 관계설정에서 중·한 FTA, 중·일 FTA, 중·일·한 FTA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한·일 FTA가 먼저 성사됨으로써 자국이 역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한 FTA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⁴³⁾

42) 여수옥,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 이슈』, 「세계경제」 2006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01, pp.47-48.

43) 조현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계경제」 2004년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05, p.15.

제3장 한·중·일 제조업 교역현황 및 FTA의 효과분석⁴⁴⁾

제1절 한·중·일 제조업의 교역추이 및 특징

1. 한·중·일의 세계교역 비중

2004년 현재 한·중·일은 세계의 제11위, 3위 및 4위의 교역대국으로서 세계교역의 2.6%, 6.3% 및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3국이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13.3%에서 2004년의 14.6%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중·일 3국의 세계교역 비중이 과거 10년간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중국교역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일본의 세계교역 비중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표 3-1>).

중국의 세계교역에 대한 비중은 1995년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1/5수준인 2.8%에서 2004년에는 미국의 1/2수준인 6.3%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교역의 위축으로 그 비중이 2.7%에서 2.6%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비중은 7.8%에서 5.6%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교역의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2000~2004년 기간 중 세계교역 증가율의 2.6배가 넘는 연평균 24.9%의 교역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일본도 1990년대에 비해서는 무역증가세가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평균과 같은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5년 세계 11위의 무역국에서 2004년에는 교역규모 1조 1,547억 달러로 미국(2조 3,418억 달러), 독일(1조 6,299억 달러)에 이어 세계

44) 김석균,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및 무역보완관계분석』, 「산은조사월보」 2004-1, 한국산업은행. p.3.

3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4,776억 달러)은 같은 기간 중 12위에서 11위로 한계단 올라선 반면 일본(1조 203억 달러)은 3위에서 4위로 후퇴하였다(<표 3-2>).

<표 3-1> 한·중·일의 세계교역 비중 추이

(단위: %)

| | 1995년 | | | 2000년 | | | 2004년 | | |
|-------|-------|------|------|-------|------|------|-------|------|------|
|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 한국 | 2.7 | 2.7 | 2.7 | 2.8 | 2.5 | 2.6 | 2.8 | 2.4 | 2.6 |
| 중국 | 3.0 | 2.6 | 2.8 | 4.0 | 3.5 | 3.7 | 6.6 | 6.0 | 6.3 |
| 일본 | 9.0 | 6.7 | 7.8 | 7.7 | 5.9 | 6.8 | 6.3 | 4.9 | 5.6 |
| 한·중·일 | 14.7 | 12.0 | 13.3 | 14.4 | 11.9 | 13.1 | 15.8 | 13.3 | 14.6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2005.12.

<표 3-2> 한·중·일 교역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단위: %)

| | 1995~2000년 | | | 2000~2004년 | | |
|-------|------------|------|------|------------|------|------|
|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 세계 | 4.8 | 5.2 | 5.0 | 9.4 | 9.6 | 9.5 |
| 한국 | 5.5 | 3.5 | 4.5 | 10.2 | 8.8 | 9.5 |
| 중국 | 10.8 | 11.2 | 11.0 | 24.2 | 25.7 | 24.9 |
| 일본 | 1.5 | 2.5 | 1.9 | 4.2 | 4.6 | 4.4 |
| 한·중·일 | 4.4 | 4.9 | 4.6 | 11.9 | 12.8 | 12.3 |

자료: 상계자료, p.50.

2. 한·중·일의 역내교역 추이 및 특징

1990년대 후반 세계평균을 밑돌던 한·중·일 3국 전체의 교역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중국 무역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교역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한·중·일의 교역 활성화에는 3국간 역내교역의 증가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별로는 다소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0~04년간 총교역이 연평균 23.9%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역내교역 증가율은 21.7%에 그치고 있어 중국 총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역내교역 증가율이 역외교역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역내교역 증가율이 역외교역 증가율 7.4%를 2배 이상 상회하는 15.2%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역내교역 활성화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역내교역의 증가율이 역외교역 증가율의 5배를 넘고 있다(<표 3-3>).

한·중·일 역내교역의 활성화는 한·일 양국의 대중국 교역이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4년 19.6%로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5.5%에서 13.2%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수출의 경우 5.0%에서 13.1%로, 그리고 수입의 경우 10.7%에서 20.7%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한·일의 대중국 무역 급증에 따라 중국은 2000년에 한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에서 2004년에는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일본에서도 중국은 2000년 제2위의 수입대상국에서 2002년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표 3-3> 한·중·일 역내외교역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단위: %)

| | 1995~2000년 | | | | | | 2000~2004년 | | | | | |
|-------|------------|------|-----|------|------|------|------------|------|------|------|------|------|
| | 역내교역 | | | 역외교역 | | | 역내교역 | | | 역외교역 | | |
|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수출 | 수입 | 계 |
| 한·중·일 | 5.7 | 6.7 | 6.2 | 3.9 | 4.0 | 4.0 | 17.8 | 17.5 | 17.6 | 11.1 | 11.8 | 11.4 |
| 한국 | 8.2 | 2.2 | 4.8 | 4.9 | 4.0 | 4.5 | 16.4 | 14.1 | 15.2 | 8.1 | 6.4 | 7.4 |
| 중국 | 8.6 | 10.5 | 9.6 | 11.5 | 11.5 | 11.5 | 17.6 | 24.7 | 21.7 | 25.8 | 26.0 | 25.9 |
| 일본 | 2.3 | 6.7 | 4.5 | 0.9 | 1.0 | 0.9 | 18.9 | 12.3 | 15.3 | 2.5 | 3.5 | 2.9 |

자료: 상계자료, p.51.

<표 3-4> 한·중·일 역내교역의 비중 추이

(단위: %)

| | | 한국 | | 중국 | | 일본 | | 한중일 역내교역 | |
|----|----|-------|-------|-------|-------|-------|-------|----------|-------|
| | | 1995년 | 2004년 | 1995년 | 2004년 | 1995년 | 2004년 | 1995년 | 2004년 |
| 한국 | 수출 | - | - | 7.0 | 19.6 | 13.0 | 8.5 | 20.0 | 28.1 |
| | 수입 | - | - | 5.5 | 13.2 | 24.1 | 20.6 | 29.6 | 33.8 |
| 중국 | 수출 | 4.5 | 4.7 | - | - | 19.1 | 12.4 | 23.6 | 17.1 |
| | 수입 | 7.8 | 11.1 | - | - | 21.9 | 16.8 | 29.7 | 27.9 |
| 일본 | 수출 | 7.1 | 7.8 | 5.0 | 13.1 | - | - | 12.1 | 20.9 |
| | 수입 | 5.2 | 4.8 | 10.7 | 20.7 | - | - | 15.9 | 25.6 |

자료: 상계자료, p.51.

3. 한·중·일 3국간의 상대교역 분석

현재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가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들어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3국간 무역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홍콩을

45) 그러나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수년 동안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에서 비롯되는 통상으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창재·홍익표(1999),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KIEP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제3권, 제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8-120 참조.

경유한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전개하였다. 당시 양국간의 무역량은 크지 않았으나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⁴⁶⁾.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7%나 증가하였으며, 대중 수입도 동시에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양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간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부상을 들 수 있으며, 중국경제가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은 전자·전기 및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 수입품목은 1992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산물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농산물에 더해 상술한 수출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 및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1995년 8.7%에서 2000년에는 2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중수입구조가 기존의 원자재 중심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2년 이후 양국의 무역관계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형태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⁷⁾

한편 한·일 양국간 무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양국의 무역량은 1995년을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양국의 무역관계는 ①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며 ②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으나,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

46)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창재 저(2001),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2-61참조.

47) Kim, Woon Bae(2001)"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eed for the Free Zone Network in the Yellow Sea Sub-Region"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Network of Free Zone in the Yellow Sea Sub-Region .

를 형성하고 있고 ③이로 인해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년 이후 한국의 대일 수출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일 수입은 8.4%나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일 수입품목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높은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⁸⁾ 한국은 전자·전기 및 기계류부문을 중심으로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수출증대는 일본의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 수출입은 거의 동일하게 전자·전기, 기계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양국간 무역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더욱 커졌으며, 이는 대중 무역적자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일하게 대만과 함께 대일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1990년에는 592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247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제품이 대중 무역적자 총규모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류와 식료품이 각각 27.6%, 26.4%를 점유하고 있다.⁴⁹⁾ 일본의 대중 수입은 섬유제품, 기계류, 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95년 이후 일본은 전자·전기에 대한 대중 수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⁵⁰⁾ 이는 일본기업이 대중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무역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90년 이전에 비해 양국간 무역관계는 점차 기초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

48) 김양희·김종걸(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분석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0-46 및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4-35 참조.

49) 구체적인 것은 일본무역진흥회 「JERTO 투자백서」 각년도판 참조.

50) 1990년 이전 일본의 대중 수입품목은 광물성원료, 금속제품, 원자재, 비금속광물 등 저부가가치 기초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일 양국간 무역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서히 상호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인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와 경쟁관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다만,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더욱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에 대해 일방향으로의 상호 보완적인 무역관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⁵²⁾

한·중·일 3국의 교역규모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3국의 총 수출액은 2002년 9,037억 달러에 달한 데 이어 2003년에는 1조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세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이들 3국의 비중은 1998년 12.9%에서 2002년에는 14.1%로 제고되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교역규모 증가는 고도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의 수출입 증가에 크게 기인하였다. 특히 중국의 수출은 90년대 중반에 한국을 추월하여 2002년에는 한국의 2배인 3,256억 달러로 세계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5.1%에 달하였다. 수입 또한 고도성장에 따라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 2003년에는 일본의 수입규모를 능가하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세계 수출입비중은 1998년 이후 각각 보합 내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수출은 경기불황기인 2001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 수출비중은 2000년 7.5%에서 2002년에는 6.5%로 하락하였다.

한·중·일 3국의 상호간 교역추이를 보면 우선 한·중간 교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51) 손찬현(2000),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KIEP 원내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0-20 참조.

52) 남상열(2000), 『동북아시아 삼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KIEP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제4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05-134 참조.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중간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238억 달러에 달하여 최근 5년간 배증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1년부터 대일본 수출을 상회한 데 이어 2003년에는 대미국 수출을 앞지름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시장⁵³⁾으로 부상하였다. 품목별로는 1998년에 비해 전기전자와 기계류(가전 포함), 유기화학제품,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규모는 1998년 이후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02년에 174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중국 교역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품목별로 보면 전자부품 등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등 중간재와 기계류 부문에서 흑자규모가 확대된 반면 섬유제품, 의류 등 경공업분야에서는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표 3-5>).

<표 3-5> 한·중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단위: %)

| 수출 | | | | 수입 | | | |
|--------|------|------------|------|-----------|------|--------|------|
| 1998 | | 2003 | | 1998 | | 2003 | |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 합성수지 | 13.7 | 전기전자 | 25.0 | 전기전자 | 17.5 | 전기전자 | 25.0 |
| 전기전자 | 11.9 | 기계류 | 19.7 | 석유류 | 11.2 | 기계류 | 9.4 |
| 석유류 | 9.6 | 유기화학 제품 | 8.8 | 철강재 | 6.0 | 석유류 | 7.6 |
| 기계류 | 8.5 | 합성수지 | 7.9 | 곡물 | 5.5 | 식물의류 | 5.3 |
| 철강재 | 7.8 | 철강재 | 7.6 | 인조단섬 유 | 5.0 | 곡물 | 4.5 |
| 유기화학제품 | 7.6 | 석유류 | 5.3 | 기계류 | 4.8 | 철강재 | 3.7 |
| 가죽1차제품 | 5.0 | 자동차 | 3.8 | 선박류 | 3.6 | 편물의류 | 3.6 |
| 인조장섬유 | 4.6 | 정밀기기 | 2.1 | 유기화학제품 | 2.9 | 어류 | 3.1 |
| 제지 | 4.3 | 인조장섬유 | 1.8 | 어류 | 2.9 | 알루미늄제품 | 2.6 |
| 인조단섬유 | 3.6 | 편직물 | 1.6 | 식물의류 | 2.4 | 정밀기기 | 2.3 |

주: HS Code 2단위 기준이며 2003년은 1~11월 수출입실적 기준임.

53)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3년 1~11월 기준으로 18.0%로서 대미국 수출비중 17.6%를 상회하였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04년) 참조.

자료: 산은조사월보(2004.1), 한국산업은행, p.5.

한국·일본간 교역의 경우 한국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로 2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한국의 대일 수입은 2002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998년에는 4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경기 회복에 따른 대일수입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때문으로 추정된다.⁵⁴⁾ 품목별로는 전자부품, 기계류 및 정밀화학 등의 업종에서 적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산업이 일본에 비해 핵심소재 및 고부가가치제품 분야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6>).

<표 3-6> 한·일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단위: %)

| 수출 | | | | 수입 | | | |
|--------|------|--------|------|------------|------|------------|------|
| 1998 | | 2003 | | 1998 | | 2003 | |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 전기전자 | 23.0 | 전기전자 | 29.2 | 전기전자 | 31.8 | 전기전자 | 30.5 |
| 석유류 | 9.7 | 석유류 | 15.3 | 기계류 | 16.0 | 기계류 | 17.6 |
| 철강재 | 8.1 | 기계류 | 12.1 | 철강재 | 8.4 | 철강재 | 11.3 |
| 기계류 | 5.7 | 철강재 | 5.4 | 정밀기기 | 6.8 | 정밀기기 | 8.7 |
| 어류 | 5.5 | 합성수지 | 4.4 | 유기화학 제품 | 6.6 | 유기화학 제품 | 4.5 |
| 편물의류 | 5.2 | 어류 | 3.0 | 합성수지 | 4.3 | 합성수지 | 4.5 |
| 합성수지 | 3.2 | 유기화학제품 | 2.9 | 정밀화학제품 | 2.7 | 정밀화학제품 | 2.8 |
| 철강제품 | 2.8 | 철강제품 | 2.6 | 동제품 | 2.6 | 자동차 | 2.6 |
| 육류 | 2.6 | 정밀기기 | 2.6 | 자동차 | 2.0 | 유리제품 | 1.6 |
| 유기화학제품 | 2.5 | 자동차 | 1.7 | 사진용화학물 | 1.7 | 사진용화학물 | 1.4 |

주: HS Code 2단위 기준이며 2003년은 1~11월 수출입실적 기준임.

자료: 상계자료, p.6.

54) 1998년 이후 한국의 수출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달러기준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확대 추세를 보였음.

중국·일본간 교역에서는 2001년까지 수출입균형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중국의 대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중국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섬유제품과 의류에서 100억 달러 흑자를 본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류에서 적자로 나타났다(<표 3-7>).

<표 3-7> 중·일 10대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

(단위: %)

| 수출 | | | | 수입 | | | |
|-------|------|-------|------|--------|------|--------|------|
| 1998 | | 2003 | | 1998 | | 2003 | |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 직물의류 | 15.2 | 전기전자 | 17.5 | 전기전자 | 25.6 | 전기전자 | 31.3 |
| 전기전자 | 15.1 | 기계류 | 15.3 | 기계류 | 22.2 | 기계류 | 22.6 |
| 편물의류 | 9.4 | 직물의류 | 12.0 | 합성수지 | 7.4 | 정밀기기 | 8.0 |
| 기계류 | 5.3 | 편물의류 | 8.8 | 철강재 | 7.3 | 철강재 | 5.8 |
| 석유류 | 4.9 | 석유류 | 4.1 | 정밀기기 | 4.9 | 자동차 | 5.5 |
| 정밀기기 | 3.1 | 정밀기기 | 3.3 | 유기화학제품 | 3.2 | 합성수지 | 4.9 |
| 조제식료품 | 3.1 | 조제식료품 | 2.8 | 자동차 | 2.5 | 유기화학제품 | 4.3 |
| 채소 | 2.8 | 섬유제품 | 2.3 | 인조장섬유 | 2.4 | 철강제품 | 1.4 |
| 섬유제품 | 2.6 | 가구류 | 2.1 | 인조단섬유 | 2.3 | 동계품 | 1.2 |
| 어류 | 2.5 | 신발류 | 1.9 | 철강제품 | 2.2 | 인조단섬유 | 1.1 |

주: HS Code 2단위 기준이며 2003년은 1~11월 수출입실적 기준임.

자료: 상계자료, p.7.

중국의 대일적자 확대는 전기전자 등 조립가공형 산업과 경공업분야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와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55) 「일본무역통계」에서는 일본이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적자상태이며 전기전자와 기계류에서의 흑자폭도 그다지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무역통계는 상대국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홍콩경유 수출입의 산업방식과 기타 무역 통계상의 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제2절 한·중·일 무역보완관계 분석

1. 역내교역비율

일반적으로 역내교역비율이 높으면 교역국 상호간의 의존·보완관계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비율로 본 상호간의 의존·보완관계는 추세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내수출비율은 1998년 15.0%에서 2003년에는 22.2%로 높아졌으며 역내수입비율도 같은 기간중 20.5%에서 24.6%로 상승하였다(<표 3-8>).

이러한 역내교역비율은 3국 상호간 교역협정의 미체결, 원유·가스 등의 교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NAFTA, EU 등의 역내교역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NAFTA와 EU, EU와 동아시아 등 FTA 미체결지역간의 교역비율은 10~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3국간 역내교역비율이 높은 것은 3국의 산업구조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적절히 차별화되어 있는데다 지리적 인접성⁵⁶⁾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표 3-8>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단위: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출 | 15.0 | 17.0 | 18.5 | 19.8 | 20.8 | 22.2 |
| 수입 | 20.5 | 21.6 | 21.8 | 22.1 | 24.0 | 24.6 |

자료: 상계자료, p.16.

56) 지리적 인접성 효과는 운임 및 보험료 차이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로 볼수 있음. 중국과 일본을 수출대상국으로 하였을 때의 CIF가격=100으로 할 때 기타 지역의 가격은 선박운송 기준으로 약 106.4로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관세율 수준임. 따라서 지리적 인접 효과는 관세율을 상쇄할 정도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수출결합도

수출결합도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시장과의 긴밀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수출결합도 } I_{ij} = (X_{ij}/X_i)/(M_j/M)$$

(단, X_{ij}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 X_i 는 i 국의 총수출, M_j 는 j 국의 총수입, M 은 세계의 총수입(출)을 의미함.)

수출결합도가 1보다 크다면 전세계 총수입에서 교역상대국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큰 비중으로 당해국이 교역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당해국과의 긴밀도가 전 세계시장과의 평균적인 긴밀도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수출결합도는 교역구조면에서 보완성이 강할수록 지리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쌍무적인 호혜협정이 체결되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한·중·일 3국의 각국 시장에 대한 다른 양국의 수출결합도는 한·중·일 모두 1국보다 3국은 상호간 교역상의 긴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적인 통상협정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교역상의 긴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발전단계 차이에 따른 보완성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국에 대한 수출결합도는 중국(2.90)이 한국(1.81)보다 높게 나타나 일본시장의 중요성은 한국보다 중국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출특화구조가 중저가제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소비재용 수입구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시장에 수출결합도는 일본(3.10)이 중국(2.24)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다(<표 3-9>).

<표 3-9> 한·중·일 3국의 수출결합도 추이

| 시장 | 수출결합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한국시장 | 중국 | 2.15 | 2.20 | 2.10 | 2.24 | 2.24 |
| | 일본 | 2.59 | 2.79 | 2.72 | 2.96 | 3.10 |
| 중국시장 | 한국 | 3.56 | 3.33 | 3.13 | 3.15 | 3.25 |
| | 일본 | 2.90 | 2.83 | 2.53 | 2.76 | 2.86 |
| 일본시장 | 한국 | 1.83 | 2.07 | 2.06 | 1.99 | 1.81 |
| | 중국 | 3.25 | 3.10 | 2.89 | 3.07 | 2.90 |

주: 한국-중국 및 한국-일본 교역은 「한국무역통계」, 중국-일본 교역은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함.

자료: 상계자료, p.17.

이와 같은 수출결합도를 기준으로 각 3국의 다른 2국 시장에 대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시장보다 중국시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한국보다 일본시장이 더 중요하다. 그 나라에 대한 무역흑자구조와 일치하고 있어 시장이 중요할수록 그 나라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3. 한·중·일 3국 수출에서의 상호비중

다음 <표 3-10>은 동북아 3국 한·중·일만을 놓고 최근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대방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표 3-10>에서 한·중·일 3국간에 1997년 이후로 각 국의 총 수출에서 상대 2국에 대한 수출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57) 김석균,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및 무역보완관계분석』, 「산은조사월보」 578호, 한국산업은행, 2004.01.p.18.

<표 3-10> 한·중·일 3국간의 수출에서의 상호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연도 | 한국 | 일본 | 중국 | 합계 | 총수출 |
|----|------|------|------|------|------|---------|
| 한국 | 2003 | | 9 | 18 | 27 | 192,750 |
| | 2001 | - | 9.7 | 12 | 21.7 | 149,836 |
| | 1999 | | 11.0 | 9.5 | 20.5 | 143,685 |
| | 1997 | | 10.8 | 10.0 | 20.8 | 136,164 |
| 일본 | 2003 | 6.4 | | 11 | 17.4 | 473,911 |
| | 2001 | 6 | - | 6.9 | 12.9 | 403,383 |
| | 1999 | 5.8 | | 5.7 | 11.4 | 419,207 |
| | 1997 | 6.6 | | 5.6 | 12.2 | 421,067 |
| 중국 | 2003 | 6 | 22.9 | | 28.9 | 438,250 |
| | 2001 | 5.06 | 23.1 | - | 28.7 | 266,698 |
| | 1999 | 4.05 | 22.4 | | 27.0 | 194,931 |
| | 1997 | 5.5 | 24.8 | | 30.3 | 182,917 |

자료: 한국무역협회(2003.12), 「무역」, p.49.

한국의 경우 총 수출액의 20%를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 까지 그 비중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러나 개별국가로 보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1997년과 1999년도에는 약 11%였던 비중이 2001년, 2003년에 와서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한 9% 선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1997년도에 10%였던 것이 2001년 이후로는 약 10%이상의 비중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임금과 지가의 급상승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구축 요인과 중국의 풍부한 단순 노동력과 원자재, 저렴한 인건비, 내수시장 등 유인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 수출이 최근에 들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면서 총 수출에서 10~12%를 한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에 공히 5~7%의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 수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은 약 27~

30%에 달하고 개별 국가별로 볼 때 한국에 대해서는 약 5%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동력 부족, 에너지·원자재 가격, 토지개발비 상승, 엔고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0년대 초 신 엔고현상으로 인해 원가상승부담을 낮추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ASEAN보다 임금이 싼 중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도 대중국 투자 증가요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는 비중이 하락, 중국에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약 10%의 수출의존도를 양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국, 중국에 5%씩의 비중을 두고 한국은 평균 추세, 중국은 상승추세를 띄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일본에 20%이상에 이르는 수출비중을 두면서 무역에서의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한·일간의 교역비중의 추이를 보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은 2001년 이래로 9.7%에서 9%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경쟁력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직적 분업구조, 즉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한·일간 교역구조는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만큼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3국만을 보았을 때 각국이 상대 2국에 대한 무역이 절대 교역비중에서 높은 것은 아니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역의 역내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국간의 절대비중 그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동북아 역내 다른 나라들과 미국을 포함한 EU, ASEAN 등 역외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동북아 3국간 무역집중도 지수 추이

| 국명 | 연도 | 한국 | 중국 | 일본 |
|----|------|------|------|------|
| 한국 | 1999 | - | 0.78 | 2.61 |
| | 2001 | | 2.84 | 1.88 |
| | 2003 | | 3.22 | 1.98 |
| 중국 | 1999 | 1.32 | - | 2.17 |
| | 2001 | 1.79 | | 3.17 |
| | 2003 | 2.02 | | 3.21 |
| 일본 | 1999 | 2.79 | 1.52 | - |
| | 2001 | 2.57 | 2.12 | |
| | 2003 | 2.86 | 2.98 | |

자료: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arious issues (2004.6), p.46.

동북아 3국의 무역집중도 지수의 추이는 <표 3-11>과 같다. 이를 토대로 1999년대 이후 동북아 3국 역내 무역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과의 보완성과 긴밀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관찰기간 중 한국보다 일본과의 보완성과 긴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국 무역에서 역내 국가와의 결합의 강도는 한·중·일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 3국간 수출에 의한 의존관계가 크게 심화되면서 국제무역에서의 결합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한·중·일 FTA체결의 기대효과⁵⁸⁾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으로 미루어 경제협력 강화로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세계경제에서 3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제고될 것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위상제고와 지역적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는 각국의 경기상황과 산업별 가격탄

58) 최임봉, 『한·중·일 FTA 추진전망과 과제』, 「산은조사월보」 575호, 한국산업은행, 2003.10, p.24.

력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무역규모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세계전체의 교역 규모를 증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⁵⁹⁾

한·중·일 FTA를 체결할 경우 효과는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TA를 통해 3국 모두 수출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본과 중국의 수입 증가폭 역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역내 무역장벽 철폐 효과를 보면 2010년에 한국은 수출 240억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가 120억 달러 개선되며 중국은 75억 달러, 일본의 경우 259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⁶⁰⁾(<표 3-12>)

<표 3-12>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도 한·중·일 무역효과

(단위: 억 달러, %)

| 구분 | | 총액 | 증감액 | 증감율 |
|----|----|-------|-----|-----|
| 한국 | 수출 | 4,485 | 240 | 5.3 |
| | 수입 | 4,080 | 120 | 2.9 |
| 중국 | 수출 | 9,911 | 225 | 2.3 |
| | 수입 | 9,860 | 150 | 1.5 |
| 일본 | 수출 | 7,619 | 309 | 4.1 |
| | 수입 | 4,010 | 50 | 1.2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5), 『한국의 FTA 전략』, p.38.

한편 동북아 3국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통한 수출유발 효과는 품목별로 한국의 경우 식품가공, 섬유, 운송장비, 기타 기계 및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상승이 기대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식품가공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부문의 수출상승이

59)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p.29.

60)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중·일 FTA체결로 인한 무역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할 경우 역내국가에 대해 한국 227억 달러, 일본 606억 달러, 중국 240억 달러의 신규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1,073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상계서, p.71.

예상되고 있다.⁶¹⁾ 한편 일본의 수출유발효과는 섬유 및 기계부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중·일 FTA가 각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및 수출입유발효과를 보면 3국 중 한국의 경우 식품가공, 섬유, 기타 기계부문이 자유무역의 이득을, 화학부문이 자유무역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산업별 효과가 아주 미미하나 일본이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금속, 운송장비, 기타 기계류의 생산유발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섬유, 기타 제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역내 무역비중이 높고 역내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관세율이 높은 중국 및 한국에 보다 유리하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통해 미미하나마 역내 물가하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13> 한·중·일 FTA체결의 효과

| 구분 | 실질 GDP 증가율(%) | | | | 경제적 후생증가(억 달러) | | | |
|----|---------------|------|-----|-----|----------------|-----|-----|-----|
| | 3국간 FTA | 일·중 | 한·일 | 한·중 | 3국간 FTA | 일·중 | 한·일 | 한·중 |
| 한국 | 3.2 | -0.2 | 1.1 | 2.4 | 127 | -12 | 37 | 107 |
| 중국 | 1.3 | 1.1 | 0.0 | 0.0 | 8.2 | 73 | -3 | 9 |
| 일본 | 0.2 | 0.2 | 0.0 | 0.0 | 123 | 103 | 22 | 1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2). “동북아경제협력의 제도화”, 『세계경제』, p.27.

위 <표 3-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에는 양자간 FTA를 체결하

61) 박인원(2003),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분석(계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35.

는 것보다 3국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며 특히 한국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바탕으로 한 3국간 FTA의 창설은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력을 제고시키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간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바람직한 역내 분업구조의 확립은 3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TA체결이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에 있어 가공도가 낮은 분야에서 대중적자가 확대되고 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대일적자가 확대되며 대중 흑자 품목 및 산업은 흑자 확대폭이 큰 반면 대일 흑자 부문의 흑자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나 교역 구조상 대중 교역이 가격에 민감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교역개선을 위해서는 비가격경쟁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한-일 투자 자유화 협정 등 일본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직물·신발 등 경공업에 있어서도 3국간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대중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 품목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국내기업의 노력과 아울러 중저가 상품에 대해 임금 등 요소가격이 낮은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⁶²⁾

한·중·일 3국간 FTA에 있어서는 한·일 FTA교섭이 곧 시작될 전망으로 이에 거는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간 FTA로 인한 산업별 영향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가전, 기계, 정유, 컴퓨터 산업 부문의 수입증가와 이들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이 증대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 부문은 상호 경쟁력 수준이 비슷하여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장비·기자재 부문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섬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한·일 FTA 체결로 원료 수입원가의 하

62) 이수희,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10, p.72.

락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FTA 체결을 통한 상호 경제협력은 무역분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자유화 조치 등을 통한 위협과 불확실성의 해소로 역내 신규투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확대와 투자상대국의 고용, 기술이전 등 많은 부가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체결은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이윤창출과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시켜 역내 투자를 통한 생산거점을 마련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역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인 역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FTA 체결은 역내로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⁶³⁾ 따라서 동북아 역내 FTA는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양호한 무역·투자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NAFTA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역내 외국인투자(Inflow)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역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1994년 12.5%에서 1999년 5.0%로 감소하였지만 캐나다가 동 기간 중 67.8%에서 73.8%로, 멕시코가 1994년 60.1%에서 1998년 76.1%로 점진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한·중·일 역내 무역협정으로 경제성장이 앞선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의 직접투자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경우 FTA를 통해 투자자유화 보장이 확대된다면 역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접적인 효과로써 역내 무역협정이 역외 기타 국가들의 역내 무역장벽 돌파를 위한 현지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 투자가 증대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뿐 만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체결이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회원국간의 전반적 경제수준이 선진경제권에 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⁴⁾

63) 가령 한국이 NAFTA의 무관세혜택을 겨냥하여 멕시코 현지에 북미지역 상품수출을 위한 현지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다.

64) 손찬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회원국간 경제수렴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2000년 봄호, KIEP, 2000.02, p.23.

EU, AFTA, ANZCER(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hip)경제권의 FTA 전·후 1인당 GDP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분산이 작아지고 선진국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와의 FTA도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진경제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누릴 수 있으며 한·중·일 3국은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이 커 3국간 경제협력은 많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3절 한·중 교역관계 현황

1. 한·중 수출입동향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7년까지 경공업 위주의 수출 중시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으나, 수출이 부진하자 내수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다만 강력한 내수 부양책의 지속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으로 무역 흑자규모의 급감 방지와 내수 부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⁶⁵⁾ 1997~1999년 기간 중 주변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7~8%의 성장을 유지하였고 2000년에는 GDP 8%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장기적으로도 중국은 7~8%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절하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있었으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아시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그리고 해양엑스포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시장개방의 확대로 산

65) 황동인,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1999, p.2.

업구조가 재편되고 이로 인하여 외국 선진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으로 산업구조가 외국선진기업과 경쟁 도태기업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간의 교역을 살펴보면 양국간 산업보완성,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 힘입은 성장을 해왔다.

한국의 2003년도 대중국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4>과 같다. 2000년대부터 한국의 대중국 연간 교역규모는 수출 약 186억~619억 달러, 수입 128억~38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표 3-14> 참조).

<표 3-14>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동향

(단위: 억불, %)

|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 | 2005 |
|------|-------------|-------------|-------------|-------------|-------------|-------------|
| 수출 | 186.1(37.6) | 181.9(-1.4) | 237.5(30.6) | 351.1(47.8) | 497.7(41.8) | 619.0(24.4) |
| 수입 | 128.0(62.4) | 133.0(3.9) | 171.0(30.8) | 219.1(25.9) | 295.8(35.0) | 386(30.6) |
| 무역수지 | 58.1 | 48.9 | 63.5 | 132.0 | 201.9 | 233 |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2006.01)

<표 3-15> 중국의 대 한국 수출입동향

(단위: 억불, %)

|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1-9 |
|------|-------------|-------------|-------------|-------------|-------------|-------------|
| 수출 | 112.9(37.8) | 125.2(10.9) | 155.0(23.8) | 201.0(29.7) | 278.2(38.4) | 256.3(32.8) |
| 수입 | 232.3(34.7) | 233.9(0.8) | 285.7(22.2) | 431.3(50.0) | 622.5(44.3) | 557.4(22.1) |
| 무역수지 | -119 | -108.7 | -130.7 | -230.3 | -344.3 | -301.1 |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 해관 통계(2005.10)

2. 한·중 교역의 품목 현황

200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품목별로 보면 전기기기가 87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류, 유기화학, 철강, 플라스틱 등의 순이었다. 광물성 연료, 식물, 편직물, 정밀기기 등도 대중수출의 2%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6참조).

<표 3-16>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1992 | | 1997 | | 2003 | |
|------|-------------|------|-------------|-------|--------------|
| 품목 | 금액(비중) | 품목 | 금액(비중) | 품목 | 금액(비중) |
| 석유화학 | 435(16.4) | 석유화학 | 2,242(16.5) | 전기기기 | 8,713(24.8) |
| 철관 | 420(15.8) | 가죽 | 789(5.9) | 기계류 | 7,036(20.0) |
| 철강 | 244(9.2) | 경유 | 782(5.80) | 유기화학 | 3,111(8.9) |
| 가죽 | 140(5.3) | 철관 | 646(4.8) | 철강 | 2,685(7.6) |
| 인조섬유 | 130(4.9) | 유류제품 | 553(4.1) | 플라스틱 | 2,606(7.4) |
| 인조직물 | 98(3.7) | 인조섬유 | 507(3.7) | 광물성연료 | 1,868(5.3) |
| 종이제품 | 90(3.4) | 종이제품 | 448(3.3) | 철도및차량 | 1,357(3.9) |
| 섬유기계 | 69(2.6) | 장섬유사 | 428(3.2) | 정밀기기 | 854(2.4) |
| 유기화학 | 60(2.3) | 인조직물 | 394(2.9) | 인조섬유 | 605(1.7) |
| 전자관 | 60(2.3) | 편직물 | 392(2.8) | 인조직물 | 532(1.5) |
| (소계) | 1,746(65.2) | (소계) | 7,190(53.0) | (소계) | 29,367(83.6) |
| 총계 | 2,654 | 총계 | 13,572 | 총계 | 35,110 |

자료: KOTIS(중국 무역통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력 수출품 편중도는 완화 추세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수출과 내수호조로 인해 컴퓨터 및 관련 부품의 대중 수출 증가가 전년대비 71.3%로 현저하게 국내수준 및 소비성향에 따라 집중되고 있다. 10대 품목 수출 집중도는

1992년 65.2%에서 2003년 83.6%로 변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은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대의 대중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 (55억 달러)이며 이어 기계류, 광물성 연료, 곡물 등의 순이었다. 의류, 철강, 어류, 직물, 유기화학 품, 알루미늄 등도 대중 수입의 2% 이상을 차지하였고 10대 품목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수입제품의 다변화도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0대 품목 점유율은 1992년 59.1%에서 2003년 66.9%로 변했다(<표 3-17> 참조).

<표 3-17> 대 중국 10대 수입품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1992 | | 1997 | | 2003 | |
|------|-------------|------|-------------|-------|--------------|
| 품목 | 금액(비중) | 품목 | 금액(비중) | 품목 | 금액(비중) |
| 곡물 | 659(17.7) | 철강제품 | 1,205(10.1) | 전기기기 | 5,531(25.2) |
| 원유 | 223(6.0) | 원유 | 714(7.1) | 기계류 | 2,077(9.5) |
| 요업제품 | 223(6.0) | 의류 | 647(6.4) | 광물성연료 | 1,619(7.4) |
| 섬유직물 | 222(5.6) | 곡물 | 515(5.1) | 곡물 | 1,043(4.8) |
| 석탄 | 177(4.8) | 석탄 | 391(3.9) | 의류 | 1,125(5.1) |
| 견직물 | 159(4.3) | 기능제품 | 349(3.4) | 철강 | 783(3.6) |
| 식물원료 | 135(3.6) | 철관 | 327(3.2) | 어류 | 675(3.1) |
| 철강제품 | 103(2.7) | 섬유직물 | 326(3.2) | 인조직물 | 754(3.4) |
| 면직물 | 89(2.4) | 유기화학 | 228(2.3) | 유기화학 | 480(2.2) |
| 동물사료 | 2,200(59.1) | 음향기기 | 186(1.8) | 알루미늄 | 579(2.6) |
| (소계) | | (소계) | 4,589(45.4) | (소계) | 14,666(66.9) |
| 총계 | 3,725 | 총계 | 10,117 | 총계 | 21,909 |

자료: KOTIS(중국 무역통계) 재인용

3. 한·중 기술경쟁력 분석⁶⁶⁾

한·중 양국간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국기업의 80%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는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빠른 기술개발 속도가 지속된다면 4년 이내에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03)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기술개발속도는 현재로서는 한국기업의 94% 수준이나 조선, 정보통신, 철강 등 업종의 기술개발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 강력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설계 및 소재개발 부문에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조립가공기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표 3-18>).

정보통신 분야는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인한 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속한 시장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은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큰 관계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고 기계산업은 자본재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기반산업 역할을 하는 관계로 수요확대효과가 기술경쟁력을 확충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한국기업 대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단위: %)

| 종합 | 현 황 | | | | | | | 전망 | |
|----|------|------|------|------|------|------|--------|------|------|
| | 제품설계 | 소재관련 | 부품관련 | 조립가공 | 공정관리 | 개발속도 | 기술격차 | 2007 | 2010 |
| 80 | 78 | 78 | 79 | 82 | 79 | 94 | -3.08년 | 87.0 | 94.5 |

주) 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전경련,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01, p.27.

66) 송희영, 『중국의 반덤핑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0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05.04, p.37.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국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큰 부분으로서 아직 중국의 투자가 실용적 부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지금까지 행해지던 중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인하여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표 3-19>).

<표 3-19> 한국기업 대비 업종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단위: %)

| 품목 | 종합 | 제품설계 | 소재관련 | 부품관련 | 조립가공 | 공정관리 | 개발속도 | 격차 |
|--------|----|------|------|------|------|------|------|--------|
| 자동차/부품 | 76 | 73 | 69 | 73 | 79 | 74 | 99 | -3.17년 |
| 조선 | 80 | 75 | 75 | 85 | 80 | 90 | 105 | -7.67년 |
| 전자 | 80 | 77 | 75 | 73 | 85 | 81 | 91 | -3.06년 |
| 정보통신 | 88 | 83 | 93 | 92 | 93 | 91 | 108 | -2.05년 |
| 기계 | 83 | 85 | 85 | 80 | 78 | 78 | 93 | -2.78년 |
| 건설 | 78 | 78 | 84 | 84 | 84 | 74 | 80 | -4.5년 |
| 철강 | 83 | 85 | 85 | 85 | 85 | 85 | 102 | -1.8년 |
| 비금속 | 55 | 55 | 70 | 65 | 55 | 55 | 70 | -6.0년 |
| 석유화학 | 88 | 85 | 85 | 84 | 85 | 82 | 88 | -2.15년 |
| 섬유의류 | 78 | 69 | 74 | 78 | 85 | 80 | 92 | -2.53년 |
| 식음료 | 86 | 88 | 91 | 91 | 83 | 83 | 85 | -2.25년 |
| 제약.바이오 | 74 | 69 | 69 | 68 | 72 | 72 | 93 | -5.17년 |

주) 수치는 한국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상계자료, p.36.

4. 미·일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분석

수출측면의 경쟁력 비교지표인 시장점유율을 세계 주요시장인 미국 및 일본시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한·중 상품의 미국 및 일본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 | 미국시장 | | | | | | 일본시장 | | | | | |
|----|--------|-----|-----|------|------|-------------|--------|------|------|------|--------|-------------|
| | '96(a) | '00 | '01 | '02 | '03 | 증감 (b-a) | '96(c) | '00 | '01 | '02 | '03(d) | 증감 (d-c) |
| 한국 | 3.0 | 3.5 | 3.3 | 3.3 | 3.1 | 0.1 | 4.9 | 5.8 | 5.3 | 4.9 | 5.0 | 0.1 |
| 중국 | 7.1 | 9.1 | 9.6 | 11.5 | 12.9 | 5.8 | 12.3 | 15.2 | 17.5 | 19.7 | 21.2 | 8.9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05.04).

<표 3-20>에서 보여 주듯이 2003년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2.9%로 한국(3.1%)의 4.2배, 일본시장 점유율은 21.2%로 한국(5.0%)의 4.2배를 기록하였으며 1996~2003년 중 한국의 미국시장 시장점유율은 0.1%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중국은 5.8% 상승하여 한국과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본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한국이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8.9% 상승하여 중국 상품이 세계주요시장에서 그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한·중 양국간의 기술격차로 인하여 한·중 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했던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기술격차가 차츰 해소되면서 한·중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한·중 산업별 비교우위⁶⁷⁾

중국의 고성장과 개방화는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⁶⁸⁾ 중

67) 이종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과 정책시사점』, 「한국동북아 논총」 34권, 한국동북아학회, 2005, p.31.

68) 본장은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및 편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중 특별세

국의 경제적 부상은 주로 세 가지 기능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제조국인 동시에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중국의 빠른 공업화와 생산설비 확장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의 증가는 중국의 수입수요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중국은 매력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저히 중국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기 세 가지 복합적인 기능의 상호작용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관계 및 산업별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통해 한·중간 산업별 비교우위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⁶⁹⁾

아래 <표 3-21>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RCA지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2003년 현재 섬유(2.43)와 전기전자(1.99)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중에는 특히 통신기기(3.64)와 반도체(2.26)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IT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적절히 드러내 주고 있다. 기타 RCA지수가 1이상인 분야는 컴퓨터(1.84), 철강/금속제품(1.39), 가전기기(1.28), 차량 및 부품(1.24) 등으로 나타나 컴퓨터, 반도체 및 통신기기, 철강, 가전,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높은 경쟁력을 실감하게 한다.

그 반면 한국의 피혁제품(0.82), 기계(0.81), 화공(0.76), 비철금속(0.73) 등이 RCA지

이프가드조치가 우선적용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추론한 것임.

69)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도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RCA = (X_{ij}/X_i) / (X_{wj}/X_w)$, X_{ij} 는 I국의 j 재화의 수출가액, X_{wj} 는 j 재화의 세계 총 수출가액, X_i 는 I국의 총수출가액, X_w 는 세계 총 수출가액. 즉 현시비교우위는 당해국가 당해상품의 수출이 세계 당해 제품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액가액에서 당해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며 RCA값이 1이 넘으면 당해국가의 당해 상품에 현시비교우위가 있고 1이하이면 현시비교열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RCA란 결국 당해 국가의 당해상품의 현시비교열위가 있다는 것이다. 동 RCA지수는 비교적 간단한 비교우위 측정치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수가 1이하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0.54), 정밀기기(0.51), 종이/인쇄출판(0.46), 기타제조업(0.45), 목재가구(0.04) 등의 품목에서 가장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들은 주로 노동집약적이거나 경공업으로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산업별 RCA지수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피혁제품(4.25)과 의류(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RCA지수가 1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컴퓨터(2.74), 섬유(2.56), 통신기기(1.90), 가전기기(1.74), 기타 제조업(1.28), 비철금속(1.0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재가구(0.85), 정밀기기(0.85), 철강/금속제품(0.81), 종이/인쇄출판(0.30), 차량 및 부품(0.11)에서는 RCA지수가 매우 낮아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표 3-22>).

1998년과 2003년 사이의 RCA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별 경쟁력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통신기기 및 컴퓨터 분야에서 RCA지수가 급상승한 반면 반도체, 가전기기, 섬유 등에서는 여전히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추이 자체는 감소세를 시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서 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의류에서는 RCA지수가 낮아지긴 하였으나 절대적인 지수는 여전히 높아서 동 품목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1> 한·중 양국의 RCA 지수 비교

| 분류 | 한국 | | | 중국 | | |
|---------|---------|---------|-------|---------|---------|-------|
| | 1998(a) | 2003(b) | b-a | 1998(a) | 2003(b) | b-a |
| 피혁제품 | 1.62 | 0.82 | -0.80 | 4.61 | 4.25 | -0.36 |
| 목재가구 | 0.08 | 0.04 | -0.04 | 0.77 | 0.85 | 0.08 |
| 종이/인쇄출판 | 0.54 | 0.46 | -0.08 | 0.27 | 0.30 | 0.02 |
| 섬유 | 3.01 | 2.43 | -0.59 | 2.41 | 2.56 | 0.14 |
| 의류 | 0.94 | 0.54 | -0.41 | 4.16 | 3.21 | -0.95 |
| 전기전자 | 1.49 | 1.99 | 0.49 | 1.09 | 1.79 | 0.70 |
| 컴퓨터 | 0.71 | 1.84 | 1.14 | 1.02 | 2.74 | 1.72 |
| 통신기기 | 1.16 | 3.64 | 2.48 | 0.89 | 1.90 | 1.01 |
| 가전기기 | 1.12 | 1.28 | 0.16 | 1.53 | 1.74 | 0.21 |
| 반도체 | 3.94 | 2.26 | -1.68 | 0.32 | 0.55 | 0.23 |
| 기계 | 0.59 | 0.81 | 0.22 | 0.35 | 0.61 | 0.25 |
| 정밀기기 | 0.68 | 0.51 | -0.18 | 1.07 | 0.85 | -0.22 |
| 차량 및 부품 | 0.92 | 1.24 | 0.32 | 0.05 | 0.11 | 0.06 |
| 기타 수송장비 | 0.47 | 0.16 | -0.31 | 1.25 | 0.84 | -0.41 |
| 철강/금속제품 | 1.68 | 1.39 | -0.29 | 0.91 | 0.81 | -0.10 |
| 비철금속 | 0.78 | 0.73 | -0.05 | 1.08 | 1.03 | -0.05 |
| 화학 | 0.74 | 0.76 | 0.01 | 0.72 | 0.53 | -0.19 |
| 기타 제조업 | 0.91 | 0.45 | -0.47 | 1.53 | 1.28 | -0.25 |

자료: UN COMTRADE를 이용하여 계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경제'에서 재인용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분야로서 이들 산업의 경우 양국 모두에서 RCA지수가 높아짐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70) 중국의 동 산업에서의 비약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중국 국내기업의 약진은 물론 중국의 컴퓨터, 통신장비, 가전기기 등에 기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중국내 생산과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동 품목에서의 비교우위가 현저히 높아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표 3-22> 한·중 양국의 비교우위 및 열위부분(2003)

| 국가 | 현시비교우위품목(RCA>1) | 현시비교열위품목(0<RCA<1) |
|----|--|---|
| 한국 | 통신기기(3.64), 섬유(2.43), 반도체(2.26), 컴퓨터(1.84), 철강/금속제품(1.39), 가전기기(1.28), 차량 및 부품(1.24) | 피혁제품(0.82), 정밀기기(0.51), 화공(0.76), 비철금속(0.73), 기계(0.81), 의류(0.54), 종이/인쇄출판(0.46), 기타제조업(0.45), 목재가구(0.04) |
| 중국 | 피혁제품(4.25), 의류(3.21), 컴퓨터(2.74), 섬유(2.56), 통신기기(1.90), 가전기기(1.74), 기타제조업(1.28), 비철금속(1.03) | 목재가구(0.85), 정밀기기(0.85), 철강/금속제품(0.81), 기계(0.61), 반도체(0.55), 화공(0.53), 종이/인쇄출판(0.30), 차량 및 부품(0.11) |

자료: 김박수 외, 「한·중·일 FTA:제조업부문의 대응전략」, 2005.12, p.50.

한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예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첫째로 중국의 현시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될 것이 자명할 것이며 둘째로 첫째 분야에 거명된 품목 가운데 한국의 현시비교우위가 낮은 부문이 중첩된다면 동 분야는 더 높은 중국의 대한 수출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으로 피혁제품, 의류, 기타 제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동종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발동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WTO가 인정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기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외에 별도의 대중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한·일 교역관계 현황

1. 일본의 교역분석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규모를 살펴보면, 1998년, 1999년,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수입도 감소하는 년도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대국 일본은 수지면에서 항상 플러스를 보여주는 경제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3>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의 경제규모가 조금씩 호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3> 연도별 일본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원, %)

| 년도 | 수출금액 | 증가율 | 수입금액 | 증가율 | 수지 |
|------------------|------------|------|------------|-------|------------|
| 1989 | 37,830,368 | 11.5 | 28,973,111 | 20.6 | 8,857,257 |
| 1990 | 41,454,609 | 9.6 | 33,859,148 | 16.9 | 7,595,461 |
| 1991 | 42,370,113 | 2.2 | 31,876,979 | -5.9 | 10,493,133 |
| 1992 | 43,012,281 | 1.5 | 29,527,419 | -7.4 | 13,484,862 |
| 1993 | 40,202,449 | -6.5 | 26,826,357 | -9.1 | 13,376,091 |
| 1994 | 40,497,553 | 0.7 | 28,104,327 | 4.8 | 12,393,225 |
| 1995 | 41,530,895 | 2.6 | 31,548,737 | 12.3 | 9,982,158 |
| 1996 | 44,731,311 | 7.7 | 37,993,421 | 20.4 | 6,737,890 |
| 1997 | 50,937,992 | 13.9 | 40,956,183 | 7.8 | 9,981,809 |
| 1998 | 50,645,004 | -0.6 | 36,653,647 | -10.5 | 13,991,357 |
| 1999 | 47,547,556 | -6.1 | 35,268,008 | -3.8 | 12,279,548 |
| 2000 | 51,654,198 | 8.6 | 40,938,423 | 16.1 | 10,715,775 |
| 2001 | 48,979,244 | -5.2 | 42,415,533 | 3.6 | 6,563,711 |
| 2002 | 52,108,956 | 6.4 | 42,227,506 | -0.4 | 9,881,450 |
| 2003 | 54,548,350 | 4.7 | 44,362,023 | 5.1 | 10,186,327 |
| 2004 | 61,182,034 | 12.2 | 49,175,646 | 10.9 | 12,006,389 |
| 2005 | 65,659,982 | 7.3 | 56,881,842 | 15.7 | 8,778,140 |
| 2006 (01~02월) | 10,857,889 | 17.3 | 10,261,058 | 28.7 | 596,831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2006.04)

특히, 2006년 1월~2월의 수출입 물동량이 수출 17.3%, 수입 28.7%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2006년 일본 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수출입 교역량의 두드러진 증가세는 중국의 경제부상, 한국의 대일본 부품 수입 증가로 살펴 볼 수 있다.

<표 3-24> 일본의 주요 수입 국가

(단위 :백만 ¥, %)

| 국가명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중국 | 8,731,138 | 13 | 10,197,310 | 16.8 | 11,967,294 | 17.4 |
| 미국 | 6,824,958 | -5.7 | 6,759,974 | -1 | 7,070,968 | 4.6 |
| 대한민국 | 2,071,182 | 6.9 | 2,385,062 | 15.2 | 2,695,832 | 13 |
| 오스트레일리아 | 1,744,488 | -0.5 | 2,098,576 | 20.3 | 2,697,948 | 28.6 |
| 인도네시아 | 1,905,215 | 7.4 | 2,017,362 | 5.9 | 2,292,157 | 13.6 |
| 사우디아라비아 | 1,688,655 | 16.1 | 1,994,508 | 18.1 | 3,170,405 | 59 |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1,662,811 | 14.7 | 1,980,596 | 19.1 | 2,794,241 | 41.1 |
| 독일 | 1,643,678 | 5.9 | 1,846,631 | 12.3 | 1,966,868 | 6.5 |
| 대만 | 1,655,700 | -2.5 | 1,802,358 | 8.9 | 1,991,411 | 10.5 |
| 총계 | 44,362,023 | 5.1 | 49,175,646 | 10.9 | 56,881,842 | 15.7 |

자료:상계자료(2006.04)

<표 3-25> 일본의 주요 수출 국가

(단위 :백만 ¥, %)

| 국가명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미국 | 13,412,157 | -9.8 | 13,721,263 | 2.3 | 14,807,360 | 7.9 |
| 중국 | 6,635,482 | 33.2 | 7,995,868 | 20.5 | 8,839,401 | 10.5 |
| 대한민국 | 4,022,469 | 12.6 | 4,785,617 | 19 | 5,143,006 | 7.5 |
| 대만 | 3,609,890 | 10 | 4,542,523 | 25.8 | 4,809,616 | 5.9 |
| 홍콩 | 3,455,172 | 8.8 | 3,831,814 | 10.9 | 3,968,591 | 3.6 |
| 태국 | 1,853,752 | 12.4 | 2,192,173 | 18.3 | 2,477,859 | 13 |
| 독일 | 1,897,905 | 7.5 | 2,050,742 | 8.1 | 2,057,796 | 0.3 |
| 싱가폴 | 1,715,813 | -3.3 | 1,945,090 | 13.4 | 2,034,508 | 4.6 |
| 영국 | 1,528,544 | 2 | 1,635,791 | 7 | 1,663,474 | 1.7 |
| 총계 | 54,548,350 | 4.7 | 61,182,034 | 12.2 | 65,659,982 | 7.3 |

자료 : 상계자료(2006.04)

<표 3-24>, <표 3-25>는 일본의 주요 수출국가와 주요 수입국과의 교역규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는 중국, 한국,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현상은 기술력에서 앞선 일본의 제품들이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수출이 되면서 3국의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부분품 수입인 것으로 <표 3-25>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일 편중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한국,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일본의 부분품으로 이루어져 동시에 수출된다는 것이다.

2. 한·일 교역 분석

2005년에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IMF 경제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대일무역 적자는 2002년 147억 달러, 2003년 190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다 2004년에는 244억 달러를 기록, 2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2005년에도 1~11월 실적치가 224억 달러에 달해 대일무역 적자는 2년 연속 2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1971년 이후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대일무역 적자는 총 2514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규모에 달하게 되었다.

대일무역 적자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향한 수출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제 부품이나 소재, 기계류를 수입해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엄청난 대일무역 적자에도 2005년 1~11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흑자는 219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3-2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위 20개 대일 수입품을 보면 반도체, 철강판, 반도체 제조용 장비, 플라스틱 제품, 전자 응용기기 등 부품·소재·기계류가 주종을 이룬다.

특징적인 것은 대일 수입 주종 품목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기타 잡제품의 시장점유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 광학 기기도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입이 많은 품목은 일본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선 전환이 어려운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20대 대일 수입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평균(가중평균) 39.3%라는 높은 수준이다.

<표 3-26> 20대 대일 수입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순위 | 품목 | 점유율 | | 순위 | 품목 | 점유율 | |
|----|--------------|------|------|----|------------|------|------|
| | | 2004 | 2005 | | | 2004 | 2005 |
| 1 | 반도체 | 21.6 | 21.3 | 11 | 유리 제품 | 51.4 | 55.6 |
| 2 | 철강관 | 60.1 | 49.5 | 12 | 기초유분 | 38.9 | 49.4 |
| 3 | 반도체 제조용 장비 | 45.1 | 38.5 | 13 | 정밀화학 원료 | 25.7 | 22.9 |
| 4 | 플라스틱 제품 | 58.7 | 60.1 | 14 | 광학기기 | 68.2 | 65.8 |
| 5 | 전자 응용기기 | 41.3 | 26.8 | 15 | 기타 화학공업 제품 | 38.4 | 38.7 |
| 6 | 기타 잡제품 | 78.8 | 76.0 | 16 | 정지기기 | 32.3 | 30.0 |
| 7 | 합금 철 선철 및 고철 | 21.3 | 23.9 | 17 | 기타 기계류 | 50.5 | 45.4 |
| 8 | 계측제어 분석기 | 31.3 | 25.8 | 18 | 석유화학 중간원료 | 46.7 | 47.7 |
| 9 | 자동차 부품 | 35.0 | 33.7 | 19 | 기계요소 | 32.9 | 30.7 |
| 10 | 기구(機構) 부품 | 45.6 | 40.9 | 20 | 합성수지 | 37.7 | 35.7 |

자료 : 상계자료(2006.04)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제조업 자급도가 높은 ‘원 세트형’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다양한 규격의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합성수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까다로운 일본 고객에게 대응하다 보니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은 이러한 일본의 세밀한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은 현장 숙련공의 기술과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로 인해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시오전기는 반도체 제조장치인 스테퍼에 쓰이는 램프를 제조하는데, 이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일본전산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용 스피들 모터(SPM) 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을 가진 일본제 부품 및 소재의 경우에는 수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일 수입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⁷¹⁾

71) 이지평, 『對日 무역적자 고질병 대책없나』 동아일보, 2006.01.10

제4장 한·중·일 FTA에 따른 문제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1절 한·중·일 FTA의 문제점

1. 한·중·일 FTA의 문제점

현재로서는 한·일 FTA와 관련하여 일본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는 그 진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그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이냐가 그 관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역사왜곡 문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에 일본이 집착하고 있다는 측면 등이 매우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유보적인 태도가 단기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NAFTA와 EU의 빠른 발전적 유형을 보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력을 제의했을 때 자국의 주도권에 시종 집착하였으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고려하여 미국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하려 하였다.⁷²⁾

이는 한·중·일 지역경제협력과 동아시아 FTA에 대한 일본의 불분명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2) Cao, Shi Gong,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합작의 신속한 발전과 중국의 대응』,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 p.50.

그리고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요인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실상 한·중·일 FTA가 실현되려면 경제발전수준은 물론 지리적 근접성, 각국의 통상정책, 공동체 의식구조의 강화 등과 같은 요인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동북아(한·중·일) FTA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려면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그 어려움이 많다. 즉 지리적 근접성과 관련하여 북한이 동북아 FTA에 포함되어야 Landbridge를 통한 물류기능이 중국 대륙횡단철도(Trains China Rail: TCR),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Trains Siberia Rail: TSR)로 연결됨으로써 강화될 수 있으며 경제발전수준 역시 한·중·일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북한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정책이 현재로서는 상이하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 대부분의 협정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바, WTO가입 후인 현재로서도 이를 얼마나 개선할지 미지수이다. 또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 된다. 이 외에도 공동체 의식구조의 강화와 관련하여 아직도 한국과 중국은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일본에 대하여 과연 미래지향적인 상호공존전략을 구축할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배타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⁷³⁾

물론 한·중·일 FTA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 근거로써 NAFTA와 EU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FTA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동북아만이 아닌 ASEAN과의 협력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는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아직은 한·중·일 FTA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현재로서는 그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3) 김양희, 김종걸, 전게서, p.45.

2. 한·중 FTA의 문제점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측이 아직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한국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은 중국의 화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ASEAN국가들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까지 중국-ASEAN FTA를 개설할 것에 이미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즉 중국은 동북아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ASEAN 자유무역지대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가 쉬운 문제부터 처리해 나가겠다는 중국정부의 기본전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ASEAN FTA에서는 ASEAN시장에서의 중국상품의 충격제거가 그 핵심문제로 중국정부는 파악하고 있는 바, 일방적으로 중국의 수출확대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닌 중국의 수입에 대한 개방도 촉진시킴으로써 ASEAN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상품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상품이 ASEAN 전체시장을 장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⁷⁴⁾ 오히려 광활한 중국시장이 ASEAN의 많은 상품들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ASEAN의 요구대로 동남아 주변국들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제공해 줌으로써 ASEAN의 대 중국수출이 증가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게 되면 농산품이 가장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⁷⁵⁾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대외협상에 임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내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조조정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합리적이고도 장기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중 FTA에 있어서 농산물 문제는 언젠가 해결되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는 틀림

74) Cao, Shi Gong, 전개논문, pp.52-53.

75) 한국은 OECD회원국이지만 농업부문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없다.

한·중 FTA는 현재 그 논의만 시작되었을 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민감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이 아직은 한·중 FTA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다고 생각지 않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중국은 한·일 FTA를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한·일 FTA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난 후에 한·중 FTA를 실현시킨 후, 한·중·일 FTA를 하나로 묶겠다는 커다란 전략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⁷⁶⁾

3. 한·일 FTA의 문제점

일본은 한·일 FTA에 대하여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본은 성공적인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한·일간의 관계강화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한·일 FTA기구의 설립을 통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FTA가 실현될 경우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 여부, 한국산업의 기반약화, 대일본 무역수지 악화,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가능성, 대일본 의존도 심화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⁷⁷⁾ 한·일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결국 한·일 FTA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국 투자확대와 무역역조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FTA 실현시 기계류, 부품류, 소재부문 등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없는 한국

76) Cao, Shi Gong, 전계논문, p.55.

77) 정인교, 『韓·日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63.

78) 전국경제인연합회(2001)가 FT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59.7%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부정적, 27.3%는 긍정적, 6.5%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응답기업의 2/3이상이 FTA체결이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66.2%)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정인교, 상계논문, pp.100-101.)

에 직접투자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에 미온적으로 보이는 한국정부 및 노사관계의 개선여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일본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의 투자적합지역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일 FTA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양국간 FTA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현격히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도 결코 일본기업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으며, 한·일 무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와 일본 농림수산성의 강경자세 등은 한·일 FTA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NAFTA에서도 농수산물교역은 관세철폐의 예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농수산물은 양자간 교섭이 아닌 WTO의 다자간교섭원칙에 입각해 추진하자고 주장한다.⁷⁹⁾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정부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측은 최근의 일본-싱가포르 FTA의 경우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을 현 상태에서 동결, 민간분야 추가협상 등의 여지를 남겨둔 채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에 역점을 둔 포괄적 경제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포괄적 연대협정에 동의하면서도 일본의 농수산물 추가개방,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대한투자과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피해보상조치의 사전 명시화를 주장하고 있다.⁸⁰⁾ 이는 한·일 FTA 뿐 아니라 특히 중·일 FTA 및 한·중·일 FTA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장차 한·일 FTA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NAFTA나 EU 등과 같은 경제협력체들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동북아 FTA' 실현은 물론 'ASEAN+동북아 FTA'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아직은 한·일 FTA가 시기상조이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식의 단계적이고도 점증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79) 김양희, 김종걸, 전게서, pp.39-40.

80) 김도형, 『한일 FTA관련 주요 쟁점논의 배경』,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 p.61.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WTO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방지하고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허용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자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범람하는 지역주의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인 APEC이 있으나 현재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 하에서는 FTA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고 개방적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APEC 차원의 자유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낮다. 따라서 APEC를 통한 지역주의 대응방안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불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발판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둘 수밖에 없었으며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해외투자 등 대외 부문에 더욱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⁸¹⁾

그러나 국가간·지역간 경제통합이 심화·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 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FTA 체제하의 경제운영은 한국경제가 시장개방과 경쟁에 익숙해 지고 경쟁적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무역자유화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큰 충격과 무역수지의 적자가 예상된다.⁸²⁾

81)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98년 가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p.13.

82) 김남두, 『자유무역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2.4. p.79.

한국은 FTA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WTO를 통해 지역주의화(regionalism)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지역주의화가 쉽게 없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FTA의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⁸³⁾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은 적절한 FTA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전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의 불합리한 경제제도와 각종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대외 신임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한·중·일간의 경쟁적 비교우위 분야 즉 각국 기업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 수송기계, 전기·전자, 일부 기계산업 등에 있어서 각 국간의 협력 메커니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분야의 선정 원칙으로 FTA의 동태적 이득이 최대화 되도록 양국간 산업내 교역 가능성이 크고 규모의 경제 이익이 크며 무역에 동반되는 투자가 큰 산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⁸⁴⁾ FTA의 동태적 이득은 규모의 경제이익,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 증대, 투자 증가가 3대 요소로서 특히 경쟁심화가 생존을 건 경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공생의 협력 체제로 유도되도록 양국 기업간의 산업내 교역의 여지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각국간 경쟁적 비교우위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과잉투자조정, 기술제휴 및 이전 촉진, 중소기업협력, 공정분업 및 상품 차별화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⁸⁵⁾

83)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호, 1999.8, p.493.

84) 독일과 프랑스가 농업-공산품 분야의 대타협을 토대로 하여 유럽 통합에 이른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일본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기 때문에 관세 등의 대일 시장개방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체적인 산업정책상 포기하는 산업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이양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관세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으나 우리 관심 품목 중에는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품목도 있으며 또한 비관세 장벽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협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경제에 있어서 한국 경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가 먼저 일본과의 수평적, 수직적 산업협력의 확대를 적극 추진, 양국간 교역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일 무역구조 시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첫째,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재 및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 대체를 하여야 한다.⁸⁵⁾

둘째,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대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도입으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 후발국 비교우위 분야를 확보 및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발 개도국보다 우위에 있는 양질의 저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기술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 대책으로는 첫째, 우리 상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회의 격상 추진, 수출활동 관련 일본측 규제완화 요청, 우리의 관심 11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일본의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계획 보고서」, 2000.5, p34.

86) 한국무역협회 조사국 국제무역팀, 『최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요인과 시사점』, 2001.1, p.10.

대한 투자 확대 추진 등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다. 즉 「대외진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센터」(주일 지역 전 공관)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⁸⁷⁾ 또한 우리 기업 및 지방정부의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일 무역적자 개선 노력의 다각화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일본 건설시장, 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우리 주력 산업의 중요한 시장이면서 해외투자 전략의 중심지역이며 경합관계보다 보완관계가 강해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보다도 관세율이 높고 비관세장벽도 높아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부문에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이 FTA정책에 단기간 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한국이 중국에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은 현재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 하는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및 본사를 유치하고 동시에 제조업을 지원할 물류, 금융, 정보 서비스업 등의 투자를 유치 할 필요가 있다.⁸⁸⁾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 전에 먼저 국내경제 및 산업환경의 점검을 통해 FTA 협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경제 및 산업기반이 취약할 때 FTA의 추진은 오히려 국내경제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먼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의 완화,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성공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이 갖추어진 후에 FTA의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⁹⁾

87)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 OTO 활용 방안』, 보도자료, 1999.7.20, p.29.

88) 정구현, 『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 FTA 추진 로드맵』, 삼성경제연구소, 2004.07, p.10.

89) 나형근,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경련」, 2000.11.21. p.5.

3. 통화 ·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한·중·일 경제 협력 관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현안인 금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통화 · 금융면에서 보면 한·중·일 관계의 긴밀화는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엔의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일간의 무역 · 투자의 확대는 지속되지 않는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아시아 국가가 하나같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 달러에만 고정하는 외환정책을 추진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⁹⁰⁾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명목실효환율 변동폭은 대 달러 환율 변동폭보다 크고 실질환율은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달러 외에 유로화와 엔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원화 환율이 미 달러 엔화 환율의 변동에도 조정되어짐에 따라 원/엔 환율을 안정시키게 된다.

일본은 아시아 통화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같은 유동성 지원 조치와 병행하여 안정된 통화 체제 구축과 엔화의 신속한 국제화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효과적인 대외채무관리, 그리고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규모 자본 역전에 대비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0)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21세기 일.한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일.한 경제관계연구회 보고서, 2000.5, p.30.

4. FTA의 협력시스템 정비

한·중·일 간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경제 및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3국간 정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 하느냐 하는 문제다.

한·중·일 자유무역은 아직 3국간 합의된 운영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또는 ASEM으로부터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의 운용체계는 일차적으로는 APEC의 운용체계에서와 같이 정상회의, 분야별 각료회의, 다자간 무역체제와 조화, 역내 차원의 무역·투자 활성화,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민간부분의 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¹⁾

첫째,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는 APEC나 ASEM 등의 정상회의에서와 같이 3국간 협력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회담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간 각료회의의 정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 환경, 중소기업, 재무 관련 부문 등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토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일 자유무역의 기구안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각료회담 및 고위관리회담 등을 통하여 WTO, APEC 및 ASEM 등과의 적합성을 위하여 각 기구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91) 이창재,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2.

5.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부는 FTA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FTA 체제는 출범초기부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FTA로 이익을 보는 계층의 소극적인 보상 의지와 손실 계층의 적극적 보상 요구의 비대칭적 관계가 클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요망된다. FTA 진행과정에서 보면 내부의 갈등 봉합과 합의 도출이 대외 협상보다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별로 FTA를 추진할 경우, 이해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일 FTA와 한·중 FTA 체결시의 이해 관계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칠레와의 FTA 체결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해 생산자가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업은 비싼 토지 이용료와 인건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품질경쟁력의 제고가 시급하다.⁹²⁾

일본과의 FTA 체결은 우리 농업계에 득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농업의 품질과 마케팅력을 감안할 때 일부 품목에서는 대일 수입도 증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동북아 FTA가 발족한다면 중국 농산물의 일본시장 진출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농업의 비교우위도 사라질 것이다. 대일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너무 강조한다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상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 FTA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³⁾ 그러나 취약부문에 대한 과보호는 국민

92) 정구현, 전계서, p.11.

경제 전체의 비효율과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항상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93) 박변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p.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WTO의 다자주의를 지지해 왔지만 2003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 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효되었고 한-싱가포르 FTA협상도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NAFTA나 EU의 통상압력에 맞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접국인 중국·일본과의 FTA 체결에 더욱 적극성을 떨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일본·중국과 전면적인 FTA를 체결하려면 가장 낮은 단계인 양국간 투자협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각 국가간 관세 철폐의 품목 선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 이동에 따른 제도적 문제들을 정비하여 FTA 체제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3국 FTA의 체결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관세 장벽·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 효과, 역외 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기타 정치·외교·안보상의 수치화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의 경우 동북아지역경제권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이 가시화될 때 상호 공동발전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한·중·일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경제발전이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북아 협력도구는 정치적 안정의 기초 위에서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측면보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화를 유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라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각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 유입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서비스 등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 따라 국내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영향평가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지역무역협정 하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확대된 역내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첫째, 한·중·일간에 사회적·정치적으로 상호이해하며 각국 간의 관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각 국가의 산업구조개선 및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금융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자유무역협정 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역연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문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3국 FTA의 체결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방안과 기업 차원의 방안 등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세계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지역주의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간에 사회적·정치적으로 상호이해하며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산업구조 개선 및 선진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금융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IT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산업에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FTA 체결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문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로 발생하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한·중·일 각국의 경제 단체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선진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및 상호협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시장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개선하여 최근의 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자원빈국인 한국은 교역확대를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에 있다. 이제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적인 추세에서 필수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의 확대·심화라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들이 단지 양허안 작성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FTA 체결 시 농업손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손실보전 방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부와 다른 경제부처간 뿐만 아니라 농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을 확정하여야만 농업분야 양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으로 보면 FTA의 체결이 농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한다기보다는 한국의 농업을 기업화, 대

형화, 선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경제 재편(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물론 FTA를 체결하는 데에는 취약분야의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FTA 추진방침을 정한 이상 강한 정책적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동 실무조정회의 등 범부처 대책반을 가동하고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KIEP, KIET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통상전문인력을 보강·확충하여 이들을 대책반원에 포함시켜 현장실무 체험 및 분석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의 FTA를 동아시아 FTA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일본과의 FTA는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큰 틀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동북아 3국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종속변수와 별도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최근 중국도 ASEAN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WTO에 가입하여 시장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므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FTA를 추진할 때에는 중국을 포함한 FTA 추진전략을 먼저 설립한 상태에서 여건이 나은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은 FTA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자유화를 상당 부분 이행(제조업종 관세인하의 99.3% 이행)함으로써 WTO 가입의 부정적인 요소를 흡수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AFTA가 회원국간 자유화를 완료함에 따라 내부 문제보다는 AFTA의 역외 확대 논의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6년을 전후하여 정부 차원에서 상대국과 사전에 조율한 후 미국, ASEAN, EU 등과 FTA를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 ASEAN과는 동북아 FTA를 달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FTA를 제의하는 방안과 한국이 단독으로 한·

A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2006년 시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반응 여부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개별지역과의 FTA도 필요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발효까지는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국 모두 득이 되는 WIN-WIN 협력 방식이다. IT혁명과 지역주의의 유효한 활용은 3국이 WIN-WIN하는 경제관계 구축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중·일 3국은 국가산업비전에서 역내산업비전으로 이행하고 표준화 협력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한·중·일 3국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쌍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의 창설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는 아직 3국간 합의된 운영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에 따라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 기구는 APEC이나 ASEM으로부터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방편으로 한·중·일 합의적 분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역내 구조 조정 협력과 수평 분업 구조의 고도화·확대 협력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역내 구조 조정 협력의 실례로 최근 한·일간 과잉 설비 폐기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또한 한·중·일간 수평 분업 구조의 고도화·확대를 위한 협력 역시 합의적 분업의 연상 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 한·중·일간 기술격차에 의한 분업구조, 즉 일본이 일방적으로 고도기술 제품·핵심

부품을 특화하는 분업구조는 자유무역협정 아래서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 체제로 이행하기 이전에 한국과 중국의 기반산업인 자본재·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산업기술 협력이 확대된다면 고도의 수평 분업 확대를 통하여 최소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국내문헌>

- 강승호·김진경, 『청도진출 인천기업 실태조사』, IDI연구보고서 2004-22, 인천발전연구원, 2004.12
- 강승호 외 8인, 『중국 동북3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IDI행사자료집 2004-3, 인천발전연구원, 2004.06.
- 강영문, 『WTO 체제하의 한·중 통상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0.
- 김도형, 『한·일 FTA관련 주요 쟁점논의 배경』,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7.
- 김도훈, 『동북아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동북아지역협력과 철강공동체 형성방안 세미나 자료, 2002.11.15.
- 김은국·남명숙,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부문별 이슈:제조업』,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2004
- 김종현, 『WTO가입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 정책의 경향』,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24집 (서울: 중국학 학회, 2003)
- 김번옥·김혜진·김연하, 『중국투자 제도 및 관행』, 한·중교류센터 연구보고서 2001-01,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2001.11.
- 김병순,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경제학회지」 제17권 제6호, 대한경제학회, 2004.12.
- 김선광·홍성규, 『한·중·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 「국제상학」 17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08.
- 김양희·김종걸, 『韓·日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5.
- 김익수 외 14인,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출판, 2005.
- 김주영,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평가와 전망』, 「대은경제리뷰」, 대구은행, 2002
- 김준봉, 「다시 중국이다」, 지상사, 2005.
- 김중관·안준범, 「가자! 중국으로」, 도서출판 두남, 2003.
- 김양희·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김홍석·이영주, 『중국투자 중소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03.12
- 강봉균, 『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축과 한국의 역할』, 서울국제금융포럼, 2002.5.7.
- 권순범, 『우리기업의 대중투자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 2004.12.
- 남영숙 외 3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번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 _____,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 _____, 『동남아를 둘러싼 중·일 경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2.
- _____.전영재,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10.23.
- _____, 『활발해진 동아시아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월드리포트」 제72호, 2002.11.18.
- _____,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3.31.
- _____,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2.27.
- _____,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5.22.
- 박찬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한국경제연구원, 2003.
- 박한진, 『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대책』, KOTRA, 2002.12.

- 반석교, 허흥호,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2.
- 백권호 외 5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 _____, 『중국내 한국계 외자기업의 경영현지화』, 지식마당, 2004
- 성용모,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산업경제연구」 제 26권 제1호, 한국산업경영학회, 2003.
- 송영남,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아시아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5.
- 손병해,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북아지역협력과 철강공동체 형성 방안 세미나 자료, 2002.11.15.
- 신주식, 『중국 비즈니스전략 308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심윤섭, 『중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3.
- 여수옥,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 이슈』, 「세계경제」 2006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01.
- 유희문 외 11인(2004), 「현대중국경제증보판」, 교보문고.
- 윤기관, 『중국의 WTO 가입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전략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촉진 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 이 근·한동훈, 「중국의 기업과 경제」, 박영사, 2002
- 이덕무·이충호, 『중국의 투자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현지법인 설립방안』, 「무역학회 발표 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4.
- 이장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관리: 노동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재기, 「현대중국경제론」, 청목출판사, 2005.
- 이지평·강승호, 『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과 대응전략 연구』, LG경제연구원, 2004.
- _____, 『對日 무역적자 고질병 대책없나』, 동아일보, 2006.01.10
- 유진석·정상은, 『한·중 수교 10년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8.

- 이경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측 검토결과와 시사점』, 「한국측 산업협력검토 위원회 검토결과 보고자료」, 2002.1.
- 이수희,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경훈, 『동북아 FTA 필요성과 한·중기업간 협력』, 「2002 한·중·일 FTA 남경국제통상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 임운상,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2002.9.
- 장동식, 『WTO 기업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개편과 한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WTO 제1차 다자간협상(DDA)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도출』, 한국무역학회, 2002.5.
- 정구현, 『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 FTA 추진 로드맵』, 삼성경제연구소, 2004.7.13.
- 정인교,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조현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계경제」 2004년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05.
- _____, 『제조업계의 중국 현지투자·경영 실태-현지조사 결과 분석』, KIEP, 2004.
- 지만수 외 4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정책연구 04-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최남용, 『중국특구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국제통상학회, 2003.
- 최동석,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KOTRA, 2002.12.
- 최성일, 『중국이 WTO를 만났다』, 신지서원, 2002.
- 최동석,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KOTRA, 2002.12.
- 최용민, 『대중투자의 수출입효과』,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2002.03
- 한우덕,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WTO 가입이후 중국 비즈니스전략50』, 한국경제신문, 2002
- 홍인기,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박영사, 2004
- 황동언, 『최근 일본기업의 대중국 사업 확대의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0.2

경기개발연구원,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위탁연구 2005-01호, 2005.

농림부, 『FTA대비 농업지원대책』,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모색』, 「FTA세미나 자료」, 2002.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TO 최신 중국 경제법령집』. 2002.

_____, 『중국의 유통업 현황과 진출』안, 2003.

_____, 『중국투자 실무 가이드(증보)』, 2004.

_____, 『중국투자 신전략: 투자리스크 관리·권역별 진출환경』, 2004.

_____, 『성공적인 중국투자 설명회』, 2005.

_____, 『2006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 2005.

산업자원부,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09.

_____, 『중국경제의 평가 및 전망』, 2002.

산업은행, 『WTO가입 이후 중국 신산업정책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산업은행조사부, 2002.03.

전경련 주최 한일 FTA 대토론회 발표자료, 『한·일 FTA의 노동관련 영향과 대응방안』, 2004.7.1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환경 및 투자만족도 조사』, 2004.01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2003.10.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분석』., 2004.01

_____, 『중국투자환경과 투자사례』, 2002.06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무역협회,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2.7.

한국경제연구원,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2002.5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FTA 정책 기자간담회 자료, 2002.3.

_____, 『한·칠레 FTA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 2002.10.

- _____, 『한·칠레 FTA의 의미와 주요내용』, 설명회 자료, 2002.11.
- _____, 『미·중·일 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 및 진출확대 방안』, 설명회 자료, 2002.11
- _____,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FTA 정책 기자간담회 자료, 2002.3.
- _____, 『APEC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특별조사과제 2005-4, 2005

<국외문헌>

- 馬 洪, "入世后中國同亞洲的區域經濟關係",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4.
- 福 林, "中國自由貿易區的构想", 中國經濟体制改革研究會, 2002.4.
- 房杜, "經濟全球化与區域化:影響, 趨勢及對策", 『國際經濟合作』, 對外經濟貿易研究院, 2002.9.
- 唐曉梅, "論APEC模式區域經濟一体化所面臨的挑戰", 『東北亞論壇』, 2002.9.
- 李光輝, "建立'10+3'自由貿易區前景分析家", 對外經濟貿易研究院, 2002.11.
- 呂剛·張小濟, "區域經濟一体化背景下的中日韓經濟合作",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2.
- 林毅夫·李永軍, "出口与中國的經濟增長:需求導向的分析", 北京大學中國經濟研究中心, 2002.
- 盧文鵬·李達, "創建中國-東盟自由貿易區的政治經濟學分析", 『國際貿易問題』, 對外經濟貿易研究院, 2002.9.
- 劉旭, 『韓·中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제조업』, (한국 대외경제 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2004).
- Gao, Shi-Gong, "東北自由貿易區合作的迅速發展与終歸的反應", 『2002 韓·中·日 FTA 南京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자료, 2002.7.5~7.8.
- 胡鞍綱, "中日經濟關係是威脅論還是互利論", 清華大學, 2002.8.
- 曲風杰, "中國東盟自由貿易區框架內容研究", 對外經濟貿易研究院, 2002.10.

- 徐長文, “中國 FTA 政策基本方向和向后展望”(中國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員, 2004).
- 張琦·張小濟, “積極促進中日韓三國間貿易便利”,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
- 張琦·張小濟·呂剛, “中國對日韓貿易企業面臨的貿易障壁与問題”,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
- 張琦·張小濟, “積極促進中日韓三國間貿易便利”,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
- 趙晋平·呂剛, “中日, 中韓貿易平衡与產業分工”,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2.
- 趙晋平, “從推進FTA進步-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新途徑”, 『國際貿易』第6期(北京, 2003)
- 趙晋平, “中日, 中韓貿易增長与結構分析”, (北京: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
- 장 군 저(1997), 「국제경제학: 중국적 경제개혁」, 상해인민출판사.
- 청차오 저, 최윤정·김준봉 역(2005),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 石广生, “積極參與區域經濟合作開創新格局”, 『人民日報』, 2004.4.23.
- 王治林(2004), “中國吸收外國直接投資的法律和政策(중국의 외국직접투자유치에 관한 법률과 정책)”, 「경남법학」 제19호,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王力軍, “建立東亞自由貿易區前途坎坷”, 對外經濟貿易研究院, 2002.10.
- 王永志, “中國与東盟簽署全面協議2010年建成自由貿易區”, 投產中新网, 2002.11.5.
- 中國國家統計局(2004~2005), 「中國統計摘要」.
-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2001), 「중국공업발전보고」, 경제관리출판사.
- 나카가네 카즈지, 이일영·양문수 역(2001), 「중국경제발전론」, 나남.
- 해로명성 외(2000), 「WTO가맹으로 중국경제가 변한다」, 동양경제신보사.
- Divid, H., L. Hale(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 Lipsev, R. E.(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peration of Multinational Firms", Gueens University.
- Markusen, J. E., K. Ekholm, and R. Forslid(2003), "Export-platform Foreign Direct Investment", NMER Working Paper, No. 9517.
- McGuckin, R., M. Spiegelman(2004), Restructuring China's Industrial Sector: Productivity and Jobs in China, Kitakyushu: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Vol. 2004-13, July 2004.

Nam, Young Sook(2004), "China's Industrial Rise and the Challenges Facing Korea", East Asian Review, Vol. 16, No.2.(Summer).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3(United Nations).

Grace, D. R., A. Herwing and Y. Feng. 2003. "Chinas Antidumping Regime: an Increasingly Costly Element of Doing Business in China." World Trade Magazine.(March 1).

Jung, Youngjin & Qian Hao. 2003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 A Third way for Competitional Regime?" Manuscript.

Baldwin Richard B, "The Spoke Trap Hub and 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2003

< *Internet Web Site* >

관세청, <http://www.customs.or.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농림부 FTA협상 자료실 <http://www.ma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p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무역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co.kr>
베이징저널, <http://www.beijingjournal.c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야후경제사전, <http://kr.ecodic.yahoo.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FTA <http://www.mofta.go.kr>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amemb.org.cn>
중국경제둘러보기, <http://www.chinabang.co.kr>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통계청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산업경제연구소 <http://www.cmcost.or.kr>

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http://www.neak.or.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http://www.junnong.org>

<http://www.kinds.or.kr>

<http://www.krei.re.kr>